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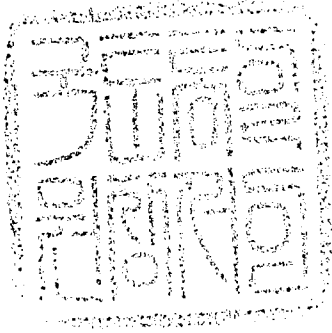
日本의 對韓半島政策과 對備策

1973. 5.

연구책임자: 지 원 식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관한 報告書로 제출 합니다

1973. 5. 25



연구책임자: 지 원 식

目 次

席 言	3
I. 日本의 現況	7
1. 政 治 面	7
2. 社 会 面	16
3. 經 济 面	19
4. 軍 事 面	31
II. 日本의 对外政策 方向	38
1. 日本의 对外政策路線	38
2. 日本外交의 当面課題	43
3. 美·蘇·中共의 動向과 日本의 向背	54
III. 日本의 对 韓半島政策	59
1. 日本의 韓半島 介入政策과 패턴	59
2. 日本의 对韓半島政策과 그 性格	63
3. 韓國에 의 逆機能	66
IV. 韓國의 对僞策의 模索	68
1. 韓·日紐帶의 強化	68
2. 外交의 多邊化	69
3. 南北對話의 主導的遂行	70
4. 韓·日基本關係의 再定立	71
5. 对日 心理的 効果志向策	71
結 論	73
參 考 書 誌	77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序 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중의 하나인 分斷된¹⁾ 韓半島를 중심한 國際環境은 급속히 재 조정되고 있다. 그 첫 調整過程에서 中共이 韓國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日本이란 과위가 北韓에까지 그 손을 뻗어 보려고 하는 段階에까지 이르고 있기도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日本이 韓半島에 개입함으로써 南北韓의 勢力均衡을 日本에게 의지케하면서 한반도의 南北關係를 좌우하려는 日本의 意圖가 보이기도하고 있는 秩序의 再調整의 決定的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의미에서 「韓半島의 새로운 秩序」를 규정하는데는 「韓·日關係의 새로운 評價」가 그 큰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韓·日關係의 새로운 評價」는 곧 東部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어서의 질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戰後秩序를 지배해온 「알타라는 秩序」가 근본적으로 수정될 不可避性에 직면하면서 東北亞에서 알타體制와는 무관하였던 日本과 中共이라는 두개의 과위가 현실화 하였다. 韓半島 및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環境도 알타體制라는 질서하에 그 支配를 받아왔다면 당연히 「새로운 韓半島秩序」를 模索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있다.

註1) 1973年4月10日「마셜·그린」美國務次官補의 말을, 동아일보, 1973年4月11日字〔1〕面에서 引用

여기에서 日本이 韓半島에서 갖는 새로운바 意味가 무엇인가를
論하는 것은 곧 東北亞의 秩序形成을 論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日本이란 勢力은 새로이 現狀打破勢力으로 등장하고 있
으며 韓半島의 「새로운 秩序」라는 轉換點에서 새로이 形成되는
東北亞의 秩序에 그 어떤 방향을 摸索하면서 「北韓接近政策」이란
形式을 취하면서 본격적인 「韓半島介入」姿勢로 나서고 있는 것이
다. 日本의 韓半島介入의 歷史的意味는 크다.

日本의 한반도개업의 樣式과 性格도 다양하였고 그 개입의 發想
도 여러가지였다. 일본의 韓半島介入은 역사적으로 決定的이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日本의 介入은 어떤 의미에서 決定的인 役割의
「可能性」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日本이란 國위가 南北韓 어느 한쪽을 강력히 지원할 때에
는 그 支援한 한쪽이 韓半島의 統一勢力으로 화하는데 크게 작용
할 수 있는 段階에 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日本
은 그 經濟力을 이용하건 政治力을 이용하던 간에 또 한번 韓半
島의 질서형성에 決定的인 役割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韓半島의 現狀打破勢力으로 등장하는
日本의 對 韓半島政策 또는 對 北韓政策의 基礎的 發想法은 그
성격이 어떤 것일까하는 基本的 疑問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美國은 과감하게 東北아시아에서 「힘의 再論을 실천하여
가고 있으며 특히 닉슨·독트린이란 政策的原理를 통하여 東北아시
아에서 日本과 中共을 權力政治의 마당에 끌어내어 均衡勢力化하여
놓았다. 여기에서 東北亞의 새로운 日·中共이란 均衡속에서 韓半

島가 兩大勢力의 相衝點으로서 어떻게 새로이 기능해야 하는가 하는 模索을 강요받고 있는²⁾ 것은 世界的으로 이름난 美國의 退役 言論人 「월터·리프만」씨의 말대로 “韓半島는 「世界緊張의 초점」”³⁾ 인 까닭이라고도 하겠다.

이러한 要請에 따라 本論은 먼저 日本의 現況을 分析 考察하고 그 對外政策方向을 概觀한 다음 그러한 테두리속에서 對韓半島政策을 展望하여 韓國의 對備策을 模索해 보려는 것이다.

註 2) 李基鐸, 아시아秩序속의 韓國位置, 世代, 1973年2月号,

P112-113 参照

3) 大韓日報, 1973年4月3日字参照

I. 日本의 現況

1. 政治面

戰後 初期에 있어서의 美國의 日本管理政策은 窮極의 目的으로서 ①日本國이 또다시 美國의 脅威가되며 世界의 平和 및 安全의 脅威가 되지 않은 것을 確實히 하는것 ②UN 憲章의 理想과 原則에 提示된 美國의 目的을 支持할 平和的이며 責任있는 政府를 窮極의 으로 樹立할 것등을 明白히 하고 政治, 經濟에 있어서의 管理政策의 目標과 內容을 다음과 같이 列挙하였는데 즉 政治에 관해서는 ①武裝解除 및 非軍事化 ③戰爭犯罪人의 指名과 處刑 ③個人의 自由 및 民主主義의 獎勵라는 三項目에 나누어지며 經濟에 관해서는 ①經濟上의 非軍事化, ②勞動, 産業 및 農業에 있어서의 民主主義的 勢力의 助長, ③平和的 經濟活動의 再開, ④賠償 및 「侵略財産」의 返還, ⑤財政, 貨幣 및 銀行政策 등이었으며 初期의 管理方針은 要컨대 日本의 非軍事化와 民主化로 要約되어질 수 있다.

美國에 의한 日本의 占領政策은 軍政에 의한 直接統治를 하지 않고 「天皇을 포함한 日本政府機關을 通하여 그 權力을 行使한다」는 間接統治의 形式을 取하였으나 事實에 있어서는 占領軍의 一方的인 이니시아티브에 의하여 民主化들의 事業이 進行되었으며 日本 支配層의 多少의 當慌과 抵抗을 물리치고 斷行된 것이었다.

여하튼 民主化政策에 관해서는 특히 「民主化五大政策」이란 것을 걸고 「憲法의 自由主義化」를 指示했으며 廣範한 社會改革을 指令

했던 것이며, 그것은 ①參政權賦與에 의한 婦人の 解放, ②労働組合의 結成奨励, ③學校教育의 民主化, ④秘密訊問 및 民權을 制限하는 制度의 撤廢, ⑤經濟諸機關의 民主化 등이 있다. 指令의 內容은 極抽象的이었지만 具體的인 制度改革의 몇몇 例를 들면 選挙法을 改正하여 婦人에게 參政權을 賦與했으며 選挙年令을 男女 모두 滿 20 歲로 引下했고 被選挙年令을 다 같이 滿 25 歲로 하였다. 또한 労働者의 團結의 自由를 保障하고 労働組合에 団体交渉權, 爭議權을 認定하는 労働組合法이 公布되었으며 二次에 걸친 農地改革을 斷行 하였다.

특히 이 農地改革은 自作農中心의 農村構造를 結果했으며 戰後에 있어서의 社會主義農民運動의 全般的인 不振의 原因이 되었고 農村이 現在에 이르기까지 保守勢力의 有力한 政治基盤을 溫存케 하는 契機를 만든 점에서 特記할만 하다.

또한 地方自治法의 制定에 의한 地方制度의 民主化, 警察制度의 改革, 6.3 制에 의한 新教育制度 등등을 新憲法의 公布를 前後해서 實施된 主要한 制度改革이지만 모두 占領當局의 全面的인 介入에 의하여 行해져서 戰後民主主義의 基底를 形成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憲法의 自由主義化」에 관한 占領當局의 指示에 따라 이른바 「平和憲法」이라고 불리워지는 現在의 「日本國憲法」이 가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45年5月3日 施行을 보았다. 新憲法에 의하여 神聖不可侵의 存在였던 天皇은 單純한 象徴的인 存在에 格下되고 國民主權의 規定등을 明白히 하여 支配層에 衝擊을 주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象徴天皇制와 國民主權主義는 적어도 理念

的으로는 日本國民들의 政治意識속에서 比較的 構造化되어 어느 程度 定着되어진듯이 보인다.

新憲法에서 지금도 問題되고 있는 것이 9條의 이른바 戰爭拋棄에 관한 宣言이다. 이는 占領當局이 初期에 있어서 堅持하였던 非軍事化政策의 具體的 實踐의 結果였는데 冷戰의 激化와 더불어 美國의 占領政策에 있어서 적어도 非軍事化政策은 轉換을 보게 되었으며 反共自由障營의 強化라는 全般政策의 틀속에서 「日本再軍備」의 方向이 提示되었던 것이다. 1950年 韓國動亂을 契機로 占領當局의 指令에 의하여 警察予備隊가 創設되어지고 그것은 오늘날 日本의 軍事大國化의 基礎工事が 되었던 것이며, 또한 그것은 戰後 日本政治에 있어서의 保守대 革新의 對決을 強化시키는데 加一層 拍車를 加하게 했던 것이다.

占領當局의 勞動政策이 民衆의 急進化, 革命化를 防止하기 위한 「改良主義」的인 性格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占領軍이 日本共産黨에 의하여 「解放軍」이라 불리워질 程度로 占領當局은 左翼勢力에 대하여 寬大하였다. 그러나 美·蘇冷戰이 激化되자 占領當局의 勞動運動이나 左翼勢力에 대한 政策은 轉換하기 始作였으며 특히 「官公庁勞動者」에 대한 勞動權은 制限되었고 그것은 그뒤 保守政權에 의하여 그대로 繼承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日本共産黨은 韓國動亂의 直前 거의 非合法狀態에 까지 몰렸고 共産勢力의 政治鬭爭中心主義를 批判하면서 結成된 日本勞動組合總評議會도 全面講和, 中立堅持 軍事基地反對, 再軍備反對등의 口號로 占領當局 및 保守政權과 衝突하게 되었다.

終戰直後에 있어서의 占領當局은 반드시는 保守勢力을 庇護한 것이 아니었지만 冷戰의 激化에 따라 保守的進路에 의하여 日本을 自立再建시킬 것을 明白히 하였다. 片山, 蘆田兩中道聯立政權이 崩壞된 뒤에 1949年1월에 行해진 第24回 總選舉에서는 保守勢力이 大勝하였지만 Mac Arthur 司令官은 그 結果를 보고 「 亞細亞의 歷史의 重大한 瞬間에 日本國民은 保守的인 政治哲學에 決定的인 委任을 賦與하였다 」라고 聲明했던 것이다. 要컨대 오늘날 까지 繼續되고 있는 保守, 革新의 對決은 그 根源이 占領時代에 비롯되었다는 데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保守革新의 對決은 國際的 環境과 얽혀서 일어나서 이데오로기의인 側面을 濃厚하게 갖었으며 때때로 極限的인 對立을 거듭하여 占領當局에 의하여 移植된 未熟한 議會民主主義를 危穢의 狀況에 까지 몰고가고 하였다. 講和條約締結前後에 있어서의 破壞活動防止法の 制定, 警察法の 改正등에 있어서의 院内外서의 對立, 全學連대모隊에 의한 「 피의 May day 」事件, Eisenhower 美國大統領의 訪日의 阻止까지 몰고온 1960年의 이른바 「 60年安保 」의 激動, 그리고 「 70年安保 」와 沖繩返還問題를 둘러싼 激突등은 그 代表的인 例가 되고 있다. 1)

日本의 政黨들은 保守系나 革新系를 莫論하고 終戰直後부터 再編成되어 混迷와 離合集散을 거듭했는데 1955년에는 二大政黨비슷한

註 1)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日本의 實態對外政策 및 對韓政策과 韓國安保를 위한 對日戰略模索, 国土統一院, 1972. PP6-8

形態에로 一旦 構造化되어졌다. 社会党은 講和條約에 對한 態度를 둘러싸고 分裂되었는데 처음 劣勢였던 左派가 顯著히 成長하였으며 그들은 階級政黨論에 立脚하고 있었다. 그런데 1955年 左派는 「國民勤勞階層의 結合體」임을 自處하는 右派와 妥協하여 再統一을 實現했으며 이에 刺戟되어 民主自由의 保守兩黨間에도 合同論이 抬頭하였는데 財界의 要望도 作用하여 「自由民主黨」으로서의 結黨을 보았다. 그러나 社会党은 議席 3分の 1線에서 제자리걸음을 繼續하였으며 더구나 1950年 安保騷動을 앞두고 右派一部가 離脫하여 「民主社会黨」을 만들므로써 再分裂을 보게 되었고 이리하여 二大政黨制란 事實上 이름뿐이었고 이른바 1.5政黨制에 不遇한 現象이었다²⁾

이러한 現象은 1972年 12月 10日 總選結果 그 版局을 달리하여 總議席數 491名中 自民黨 291名, 社会黨 118名, 共產黨 38名, 公明黨 29名, 民社黨 19名, 無所屬 16名으로 나타나 日本의 政黨은 保守對 革新勢力으로 浮刻되어 中道の勢力의 褪色을 지르게 하여 向後 國內外政治에 있어 兩勢力間의 政策的對決은 적지아니 深化될것으로 予想된다. 여기서 總選前 解散때의 各政黨別 議席數를 參考로 보면 自民黨 297名, 社会黨 87名, 共產黨 14名, 公明黨 47名, 民社黨 29名이 었다³⁾

周知하는 바와 같이 政權은 오래동안 保守黨에 의하여 支配되어

註 2) 上掲論文, P.8

3) 朝日新聞, 1972年 12月 12日字 參照

왔으며 社会党은 1947年5月에서 1948年3月까지 約 10個月동안 執權한 일이 있을 뿐이다. 특히 現政權을 担当하고 있는 自由民主黨은 1955年11月 自由黨과 民主黨이 結成하여 成立된 것인데 長期執權에서 오는 副作用에도 不拘하고 앞으로 相當한 期間동안 継続執權이 予想되어 지고 있다. 1964年11月 身病으로 물러난 池田首相의 뒤를 이은 佐藤首相은 1968年の 參議員選舉 1969年の 衆議員選舉에 圧勝하여 基盤을 굳혔고 1970年10月の 第24次 臨時黨大會에서 圧倒的支持를 얻어 前例없는 四選總裁가 되었으나 中國問題를 둘러싸고 自民黨內의 分裂이 深刻해지고 거기에 沖繩返還問題와 中國問題 物価高등을 合쳐 野黨이 聯合攻勢를 加하여 苦戰 끝에 1972年7월에 任期를 채우지 못하고 드디어 退陣 田中首相에 의하여 交替되어졌다. 同年7월에 있는 自民黨總裁選舉에서는 田中과 福田의 熾烈한 角逐戰이 벌어졌으나 田中は 大平 三木 등과 聯合戰線을 形成하여 福田를 擊破하고 總裁에 當選되었으며 이어 首相職에 就任했다. 이는 中道派인 田中가 左派인 三木 등과 合作하여 右派인 福田派를 敗北시킨 것으로 自民黨路線의 큰테두리에는 그렇게 큰 變動이 없겠으나 美國依存度는 相當히 減少될 것이 予想되어지며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지고 政治는 國民을 위한 것이며 國民의 參加와 協力을 強調하는 方向을 더욱 淸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日本政治에 있어서 利益團體들의 活動도 無視치 못할 程度로 活潑하다. 行政機構에 대한 利益團體의 活動이 顯著하게된 것은 1953年頃부터인데 占領이 終結되어 壓力活動이 立法 및 行政上

효과를發揮할 基礎條件이 이루어졌고 또 社会經濟的 變動에 의하여 職業的 利益을 組織에 의하여 擁護할 必要가 생겼던 것이다. 利益集團들은 多種多様하지만 同業的 利益 때문에 意圖的인 組織이 만들어져 全國的인 組織을 갖추게 되었다는데 壓力團體로서의 意義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選挙와도 열키설키 하는 것이다.

利益團體의 役割을 論함에 있어서 曠수없는 것은 많은 利益團體들이 退職官僚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失業救濟的인 效果가 있을 뿐만 아니라 官庁이 關係利益團體에 대한 行政指導를 行하는데도 便利하고 또 利益團體가 閣僚나 其他官庁과 接觸하여 壓力을 加하는데도 利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自民黨이 長期執權한 結果 自民黨의 公式支援團體가 400이 훨씬 넘으며 그 關係者가 400 万名이란 數字가 나오게 되고 萬年野黨과 손을 잡으면 自己네들의 利益이 政策面에 反映될 可能性이 줄어든다는 心理誘發과 더불어 與黨인 自民黨에게 有利한 條件을 形成하고 있다.

現在 總評間에는 政黨支持의 自由問題가 抬頭되고 있는데 萬一이 傾向이 進展되어 總評自體가 社会·共産·民社나 其他에 로 分化된다 할 것 같으면 第一野黨인 社会黨에게 엄청난 打撃을 出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特記할 것의 하나는 中央官庁이 自由黨議員의 補給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官庁의 行政 및 財政上의 權力을 選挙地盤의 構築등에 使用하며 當選된 그들의 經驗을 最大限 活用하여

自民党的 中堅도 되는 것이다.

日本の 議會民主主義는 占領当局에 의하여 他律적으로 移植되어진 것이지만 그 他律적인 移植의 량도 있어 아직도 土着化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선 議會民主主義를 定着시킬 政治文化의 形成이 未熟하다. 國民主權의 原理와 象徴天皇制가 憲法上으로는 規定되어졌다 하더라도 意識構造一般에 아직도 權威主義와 割拠主義(particularism)가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政治人들에 있어甚하다. 政黨이 保守와 革新이라는 政策的인 基準에 의하여 大別지어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政黨内の 構造的 側面을 살펴보면 許多한 前近代的要素가 득차있으며 保守政黨의 경우 좀더 甚한것은 事實이지만 社會黨등의 경우도 程度의 差異에 不過하다. 代表的인 性格은 党内派閥現象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親分」, 「子分」하던 封建意識의 殘滓이며 특히 自民党的 경우 黨은 派閥聯合의 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派閥形成의 主要目的은 Boss를 中心으로 追從者들에게 提供하고, 追從者들의 選舉區나 「公認」을 위해 努力해야한다. 이러한 「자리」, 「資金」, 그리고 「選舉」의 三要素에 의하여 形成되어지는 派閥들을 뿌리깊게 繁盛하여 党内紛爭의 決定的인 單位로 되고 있다.

「派閥의 解消」를 強調하고 黨의 近代化가 論議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曠遠한 形便에 있으며 1972年7月の 自民黨總裁選出에도 熾烈한 派閥間의 暗鬪가 있었음은 周知하는 바와같다.

社会党的 경우는 거의 野党的 位置를 벗어나지 못한만큼 主로 党職의 配分을 둘러싸고 「政策은 左, 人事는 右」라는 말이 示唆 하듯 自民党的 경우와 별다름없는 性格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構造改革論争」에 보는 것과 같은 名分이 作用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派閥鬭争의 道具化하고 만 것이었다.

政治文化의 未成熟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側面은 아직도 寬容과 妥協의 風土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与野는 激突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說得과 對話의 民主的習性이 제대로 기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革新派는 매때로 時代 錯誤的인 陳腐한 이데오로기 싸움을 걸고는 極限鬭争方式에 呼訴하였던 것이다⁴⁾

어찌던 現實 日本政治는 保守政權이 支配하고 있으며 予測可能한 将来까지는 또한 保守政權이 執權할것으로 予想할때 日本政治의 向背를 注目하게 되기마련이다. 즉 現 田中央政府의 支持率는 戰後 처음의 最高의 支持率인 62%라고 하며 그 内政面의 이슈는 ①物価, ②公害对策, ③社会問題(交通事故, 強力犯 등) 및 ④医療, 住宅 住宅, 土地, 減稅, 教育等願으로 나타나있고 外交面에서는 ①中共과의 国交回復, ②유엔에서의 平和外交, ③北方領土回復과 ④美国과의 關係強化等으로 나타나 있다⁵⁾ 여기서 田中政府의 높은 支持率이

註 4) 前掲論文 PP10~12 參照

5) 世界週報, 1972年8月8日号 및 朝鮮新聞, 1972年9月19日字社說參照

①그의 性格의 果斷性 ② 政策面에서 「사포」路線에서의 離脫과 ③中共과의 關係正常化 등으로 集約되어질 수 있다 된 日本의 對外政策은 予測을 不許하는 突猪的方向으로 示顯된 可能性도 排除하지 못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予測은 田中가 選舉期中 日本政治의 改革 또는 決定과 行動의 政策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며, 自民黨總裁 當選後에도 即時 政治는 國民의 것이며 國民의 支持와 理解가 必要不可欠하다고 宣言⁶⁾ 한 事實이 뒤받침할 수 있으리라고 生覺된다.

2. 社 會 面

日本의 社會面은 여러 가지 角度로 分析되어지겠으나 昨年末 亞, 細亞文化研究所 主宰 學術研究發表資料를 中心으로 考察키로 한다.

먼저 日本社會의 概況을 살혀보면 全般的으로 ①高所得先進社會, ②消費生活의 高度化, 多樣化, ③各種社會保障制度가 比較的 具備되었으나 ④公害對策, 交通事故, 凶惡法事故 등은 苦惱거리라는 것이며 勞動面에서 1970年末 現在 勞組數는 1969年 對比 3.6% 增加인 60,754 個, 勞組員數는 같은 期間對比 32% 增加인 1,160 만 5

註 6) 부산대학교 韓日文化研究所, 日本新內閣의 安保外交政策이 韓國에 미칠 影響과 對策, 國토 통일원, 1972.P.21

千名이며 労働賃金は 1969年以來 繼續上昇하여 勤勞者世帯의 月平均
收入은 約 320\$ 로서 1968年對比 11.5%上昇되었다한다. 教育面의
特色은 9年(小學 6年, 中學 3年)制義務教育으로서 英國의 10年制의
다음이며 新聞(日刊)數는 171個種에 達한다고 한다.

여기서 社會保障制度의 一面을 乳兒死亡率에서 求해보면 1968年
基準 出生千名對比, 美國이 21.7%, 스위스 15.9%, 프랑스, 20.4%,
蘇聯 26%(1967年基準)에 比하여 日本의 경우 15.3%며 最近 紙
上에서 論議되고 있는 老後生活依存度에서 子女에게 依存하지 않는
傾向이 漸增되고 있다. 즉 1950年 26.3%, 1961年 27.6%에서
1969년에는 50.3%로 變化해 가고 있다⁷⁾

日本社會의 意識構造를 살펴보면 우선 天皇存続을 希望하는 傾向
이 1946年初 輿論調査結果 85%였음은 一応 首肯이 가기도 하나
1970-72年代에 와서도 75%나 達하고 있고 日本降伏에 對하여
술은 일이라고 生覺하는 便이 우세하고, 戰後 日本事情에 對하여
敗戰狀態의 繼續이라고 보는 便이 強하며 日本의 將次 戰爭介入 可
能性을 展望(61%)라는 便이고 關心거리인 防衛와 再武裝問題에 對
하여는 現行憲法은 防衛力確保問題가 保障되 있다는 見解며, 1960
年代 下半期부터 防衛力 確保問題가 登場하였는데 日本이 強大國이
되려면 核을 保有해야 되는 것이 前提條件이라는 것이며 걸프러
닉스독트린이 日本의 再武裝 促進을 鼓鑄한다고 보겠고 또한 經濟
大國의 保護上 軍事力이 要請됨은 常識에 屬한다고 하겠다. 또한

註 7) 日本 毎日年鑑, 1971年版 및 한국 同和年鑑 1972年版參照

日本政府의 政策方向에 「이슈화」되었던 問題들은 1950年代에 條約 問題, 1950年代下半期부터 再武裝에 對한 關心에 集中되었고, 1960년에는 美日安保條約 自主外交, 그리고 戰爭과 平和問題 1970年代에는 主로 中共問題와 北方領土 回復問題로 集約된다는 것이다. 8)

叙上 日本의 社会一般意識構造는 復古的 權威意識이 溫存하여 軍事大國志向型이라고 볼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角度를 달리하여 日本社会는 지금 急激한 構造的變動을 겪고 있는데 더구나 急tempo로 이루어지고 있는 都市化와 中産階層의 엄청난 增大는 西歐型의 民主風土를 갖어올 可能性도 있지만 또 反面 다시 極端主義復活의 길을 치달을 可能性도 갖고있는 것이다. 가령 經濟의 高度成長과 繁榮은 資源의 絶對的 不足을 감안할 때 社会的 效率性의 確保를 통해서 補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勞働의 質에 直結되는 것인데 高資金과 社会的 效率性의 欠如가 結合되어 나타나면 日本의 生産品들은 急激히 質的競争性을 喪失할 것이고 이러한 難點의 어느 하나라도 發生하면 寬容과 妥協의 習性이 成熟되지 못한 社会에서는 極右와 極左가 抬頭하여 現在보다도 더 激烈한 衝突을 갖어올 可能性이 큰 것이다. 물론 現段階에 있어서 日本國民一般의 意識構造에는 占領当局에 의하여 移植된 民主化의 諸原理가 적어도 理念的으로는 어느程度 定着되어진 듯이 보이지만 아직도 習性化의 段階까지 이르지 못한 취약성이 있으며 極右와 極左의 抬頭可能性은 바로 이 취약성속에 도사리고 있는것 9) 이라고 보는 見解도 있다.

註8) 다니카 야스마사, 1946-72 사이의 여론조사에 반영된 現代日本 社会的 變遷, 1972.12, 亞細亞文化研究所, 學術研究発表論文参照

9) 前掲, 日本의 實態 對外政策 및 對韓政策과 韓國安保를 위한 對日戰略模索 P12. 参照

3. 經濟面

經濟의 總量面에서 把握되는 日本經濟는 戰后의 그것과 比較할때 實로 놀라운 것이다. GNP에서 보면 1950年の 110億弗에서 1970年の 約 2,000億弗로 20年間に 무려 19倍에 가까운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別다른 阻害要素가 없는限 尙后 GNP의 成長은 1975년에 4,000億弗, 1980년에 7,500億弗, 1985년에 1兆 3,000億弗 2,000년에는 4兆 5,000億弗에 達할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10)

이에 따라 1人당 GNP도 1950年の 130弗에서 1970年の 1,897弗이라는 놀라운 成長을 이룩한 것이다. 또한 製造業品 產出額이나 輸出面에서 보더라도 비약적인 成長을 이룩하였음은 勿論이다. 1970年을 基準해서 日本은 地球總面積의 불과 0.25%라는 좁은 땅위에서 世界人口의 3%가 운집하여 살며, 世界 總생산의 7%나 生産한 꼴이 된다. 1980年代 主要國의 GNP推定을 美國 1兆 3,339億弗, 소련 6,400億弗, 西獨 2,450億弗, 프랑스 2,230億弗, 英國 1,580億弗 그리고 中共을 1,640億弗¹¹⁾로 할때 日本은 1980年代부터 美國다음가는 世界의 經濟大國으로서 君臨하게 될 可能性도 排除할수 없을듯 하다.

다음 日本의 貿易面을 보면 輸出에 있어서 日本의 最大 貿易相

10) 허만·칸, 70年代의 日本, 통일논총, 2권 3호, P 179.

11) 上掲 통일논총, P 178, 參照

对役은 美国이었다. 日本의 輸出에 차지하는 对美輸出의 比重은 1964年부터 1970年에 걸쳐서 28%에서 31%로 상승했다. 한편 대미수입의 比重은 2年間(69~70) 29%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참조표 1)

표 1 일본대외무역의 지리적분포
(일본총수출(E)과 수입(I)중의 백분율비중)

지 역 별		1955	1961	1969	1970
선 진 지 역	E	42.2	47.9	55.9	58.0
	I	50.8	60.3	53.1	55.4
그 중 : 미 국	E	22.7	25.2	31.0	30.8
	I	31.3	36.1	27.2	29.4
카 나 다	E	2.3	2.8	3.0	15.0
	I	4.4	4.6	4.5	10.4
서 부 유 럽	E	9.6	13.9	12.9	15.0
	I	6.9	9.6	9.9	10.4
그 중	E E C	4.0	5.0	6.1	6.7
	I	3.8	5.4	5.5	5.9
E F T A	E	4.5	5.8	4.5	5.5
	I	3.1	3.8	4.1	4.0
호 주	E	2.9	2.4	3.0	3.1
	I	7.2	7.8	8.3	8.0

지 역 별		1955	1961	1969	1970
개발도상지역	E	55.9	49.6	39.3	36.6
	I	45.6	36.0	41.3	39.0
그 중 : 동남아시아	E	(37.0)	32.7	27.8	25.4
	I	(25.0)	16.8	15.8	16.0
그 중 : 한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E	(12.0)	14.4	17.1	15.9
	I	(7.0)	3.7	4.1	4.5
기 타 동 남 아	E	(25.0)	18.3	10.7	9.5
	I	(18.0)	13.1	11.7	11.5
중 동	E	(5.0)	4.9	3.9	3.3
	I	(8.0)	9.1	13.2	12.4
라틴아메리카	E	(9.0)	7.5	5.1	4.5
	I	(10.0)	8.1	7.5	7.1
아프리카	E	(5.0)	4.3	2.0	2.1
	I	(3.0)	3.4	3.8	3.5
중 공	E	1.4	0.4	2.4	2.9
	I	3.3	0.5	1.6	1.3
소 련	E	-	1.5	1.7	1.8
	I	-	2.5	3.1	2.5

資料 : 유엔국제무역통계연감 및 상품무역통계, 일본관세협회, 일본의 무역개요를 외무부, 국제경제, 1972 1호, P 102에서 재인용

일본의 제2의 주요무역대상국은 동남아세아 그룹의 여러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들 제국에 대한 수출의 중요성은 1955년부터 1970년에 걸쳐서 確實히 저하하였는바 일본의 전 수출품에 차지하는 이들 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7%에서 25%로 떨어졌으며 수입 비중은 25%에서 16%로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많은 나라는 1960년대에 있어서 일본의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일본의 수출에 차지하는 한국, 대만, 홍콩, 태국 및 싱가포르 전체의 비중은 1961년의 14%에서 1969년에는 17%로 상승했다. 그러나 1970년에는 이들 제국 전체의 비중은 약 16%로 떨어졌다. 미국에 있어서의 수입수요의 부진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 군비 지출 감소라는 결합된 영향때문에, 이들 아세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무역상대국은 1970년에 심각한 국제수지상의 곤란을 경험했으며, 그들 수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어도 몇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이들시장이 일본 상품에 비교적 포화상태로 되어버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에 대한 수출이 일본의 총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는 15%까지 着實히 상승했다. 중공 및 소련과의 무역도 1960년대에 확대했다. 이들 2개국은 1970년에는 일본수출의 각각 2.9%와 1.8%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면에 있어 1955년~64년간에 수입(GIF가격)은 항상 수출(FOB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961년에는 15億75백만불, 1964년에는 12億65백만불의 격차를 기록했다. 그뒤 일본의 무역수지는 1967년을 제외하고 흑자의 신장을 보여 1969

년에는 9億66백만불, 1970년에는 4億36백만불에 달했다. (참조표2)

표 2 일본의 특정지역과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불, 수출FOB, 수입CIF)

지 역 별	1964	1969	1970
전 세계	- 1,265	+ 966	+ 436
그중: 미국	- 494	+ 868	+ 394
서부유럽	+ 49	+ 567	+ 955
한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폴	+ 497	+ 2,119	+ 2,241
기타 동남아시아	- 8	- 52	- 341
중 동	- 668	- 1,362	- 1,703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 309	- 738	- 744
호주 및 캐나다	- 561	- 955	- 1,277

資料: 일본관세협회, 일본무역 및 일본의 수출과 수입을 외무부
국제경제, 1972. 1호, P. 103에서 재인용

1964년부터 69에 걸쳐서 일본의 모든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수지는 22億31백만불의 개선을 보였으나 그것은 다음 세가지에 의한 것이었다. 첫째로, 1964년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는 거대한 적자던것이 1969년에는 거꾸로 약 두배의 흑자로 쏠렸으며 미국

에 있어서 국내 수요와 인플레이션 壓力이 매우 강했던 이 기간 내에 13億62백만불의 개선을 보였다. 둘째로 한국, 대만, 홍콩, 태국 및 싱가포르에 대한 일본의 수출가 도합 4배로, 즉 16億23백만불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대부분은 원조 및 중기무역신통의 공여 확대에 응자되고 있다.

세째는 서구라 파와의 무역에 있어서의 수출가 라이베리아 및 파나마에의 선적등록을 위한 수출을 포함하여 1964년부터 1969년 사이에 8억5천만 불 증가한 것이다.

미국, 한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및 서구제국과의 무역에 의한 대폭의 흑자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석유 및 원재료의 주요 공급국과의 무역에 의한 일본의 적자는 7억불 가까이 증가했으며,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제국과의 무역에서는 4억85백만불, 호주 및 캐나다와의 무역에서는 4억불가까운 적자가 증가했다.

1970년에 있어서의 일본 무역수지의 흑자감소는, 중동제국, 호주 및 캐나다와의 무역의 적자증가와 대미 무역흑자쪽의 감소가 중복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12)

주요지역별 무역의 상품구성에 있어 우선 수출면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의 하나는 일본 상품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개발도상국에의 의존도가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주로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의 급속한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주 12. 외무부, 국제경제, 1972. II호, PP. 102-3 참조

한편 자본재 및 화학품은 비교적 좁은 마-진이나마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품목을 주요한 공업분야로 구분하여 보면 선진국에 수출된 소비재의 대부분은 기계집약적 상품인 승용차, 텔레비존 및 라디오로 되어 있으며, 한편 섬유는 그 무역동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소비재 가운데는 섬유가 최대 중요품목이다.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수출된 자본재의 3분의 2가까이를 차지하는 선박 및 철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재의 3분의 1이하로 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중요성이 없는 공업기계 및 화학품은 개발도상국에 수출되는 자본재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수출되는 내구소비재는 모두 주로 고소득자층에 수요가 있는 대량 생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이 분배 채널을 통하여 움직여지고 있으며 더욱이 판매 비용은 비교적 높다. 판매 비용의 중요한 요소가 다소간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즉 특정시장에 있어서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 단위당의 코스트가 저하된다는 사실은 이들 수출품목이 선진국 특히 미국의 대규모이며 활기찬 시장에 크게 집중되어 있음을 설명함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들 품목은 고소득자층의 개인적 소비재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게는 건요하지 않은 수입품으로 되어 있다.

자본재에 관해서 보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보다는 선진국에 대한 철강, 선박의 수출 신장이 더 빠르다는 사실은 선진국 시장의 신장이 전체로서 대규모이며 또한 빠르다는 사실로서 설명된다.

이 선진국 시장에 있어서 일본의 생산자는 그의 주요 경쟁상대와 비교해서 코스트면에서 현저한 우위에 있다.

1960년대초에 일본 수출의 반이상을 개발도상국에서 흡수하고 있던 공작기계 및 화학제품의 경우에도 선진국에 대한 수출쪽이 훨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62년과 69년 사이에 공업기계의 경우는 일본 전수출에 차지하는 대 선진국 수출의 비중은 27%에서 44%로 상승하였으며, 화학제품의 경우는 27%에서 34%로 상승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의 움직임은 1960년대에는 거의 비슷하게 현저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감소로 반영하여, 1961의 36%로부터 1969년에는 거의 42%로 회복되고 있다. 1970년에는 일본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또다시 감소했으나, 그것은 다만 경미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고 있던 몇가지 기본 식료품에 대한 자급율을 높인다는 일본의 정책이 이 장기적 경향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를 통하여 일본의 수입시장에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대하여 본 상대적 개선의 주된 원인은 거의 완전히 개발도상국 특히 중근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의 수입이 매우 급속히 증대한 것에 의해서다. 개발도상국은 또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곡류, 과일, 물고기, 비철금속, 섬유, 기타 상품의 일본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증대했다.

1970년에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수입비중은 의연히 상대적으로 적었으나(약 9 - 10%), 1970년대에는 급증할 것이 기대된다. 이 급상승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에 의하여 촉진될 것이다. 이 노동력 부족은, 더욱더 많은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수출용 반제품, 부분품, 구성 부품의 생산을 위하여 저임금 제국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 경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밖의 많은 일차상품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선진지역으로부터의 수입보다도 완만히 증대되어 왔다. 이 경향은 유채종자나 식물섬유와 같은 식료품의 경우에 현저하였다. 이 경향은 부분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일본의 증대하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만큼 급속히 원료품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광석의 경우, 일본의 수입 원천으로서 호주와 캐나다가 더욱 그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 경향은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수요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로서, 목재상품의 경우, 열대성 원목의 비중은 일본이 다른 종류의 목재상품, 특히 북미나 소련으로부터 송백과의

원목, 또는 북미로부터의 펄프 등의 수입을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착실히 감소하여 오고 있다. 13)

다음으로 일본과 세계의 여타지역 간의 자본의 유동면을 보면 일본이 장기자본의 순수출국으로 된것은 상품무역과 경상수지의 양쪽이 처음으로 출초로 된 1965년이였다. 자본의 총수출액은 과거 3년간에 약 배증하여 1970년에는 20억불에 달했다. 장기 자본 총유출량의 대부분(과거 3년간에 평균 70%)은 무역 신용(44%)과 차관(26%)으로 차지되었다. 이것은 수출에 밀착한 금융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는 과거 3년간 평균으로 장기자본의 총 유출액의 17% 미만이며, 무역신용과 차관의 합계보다 약간 늦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70년의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누적액은 30억불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미국의 약 650억불, 영국의 220억불, 서독의 약 50억불과 비교된다. 일본의 대외 총투자액의 약 43%는 일차산업 부문(특히 광산업, 제재업)에 대해서며, 그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받아드렸다. 두번째로 큰 투자분야는 상업, 은행

주 13. 전제, 외무부 국제경제, PR 103 - 106 참조

업등이며, 일본의 대외 총직접투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투자의 대부분은 북미 또는 서구에 행해졌다. 일본의 제조업 부분의 대외 직접투자는 총직접투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며, 아직 상대적 중요성은 낮다. 제조업 투자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되어 있으나, 동남아시아 쪽이 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을 급속히 상승시키고 있다. 이들 투자는, 특히 수송기계를 포함한 기계공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 2위는 섬유이었다. 여기서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의 구성은 장래에 변화할 것이 예상되는바, 개발도상국 그중에서도 동남아 근린제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일본 기업의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차츰 매력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장기자본의 일본의 유입은 일본으로부터의 유출에 비해서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일 직접 투자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으나, 유입한 총자본의 5분의 4는 증권투자이며, 그 증권투자의 매년의 변화는 물론, 일본의 증권시장의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 었다. 예를 들면, 일본경제가 경기후퇴중이던 1964년부터 65년에 걸쳐 대일 증권투자는 실질적으로 정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69년에는 9억불을 돌파하여 70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지만 71년에는 또다시 급속히 증가할 징조가

보인 것등 과거 10년간의 대일 직접투자에는 확실한 추세는 보이지 않으나, 매년 평균 6천만불 근방에서 변동하여 왔다¹⁴⁾고 한다. 어찌던 日本의 經濟는 世界의 頂上에 서서 特別히 「日本이 開發途上國의 開發에 協力하는것은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우리나라의 責務이다. 日本은 이것을 對外政策의 基本的인 指針의 하나로 今後에도 努力한다고 하며 日本의 開發協力方針으로 開發援助를 GNP의 0.7%까지 擴大한다」¹⁵⁾고 日本外相이 지난 72年 12月 11日부터 13日사이에 사이곤에서의 第7回東南亞開發閣僚會議席上에서 演說한바 있거니와 이미 東南亞地域에서 泰國이 日本商品의 不買選動¹⁶⁾이 始作되었음은 日本經濟의 性格을 分析하는데에 도움이 되겠으며 日本이 73年의 對外經濟援助의 基本方針¹⁷⁾을 發表한 가운데 「코리달린援助의 完全廢止」가 包含되었지만 아시아諸國間에 日本의 經濟進出에 對한 警戒心과 貿易不均衡에 對한 不滿이 高潮되고 있는 現狀¹⁸⁾은 아마도 日本의 新版大東亞共榮圈의 實現이라는 꿈과 一脈相通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주 14. 전계 외무부, 국제경제, PP 106 - 111

주 15. 世界週報, 1973年 1月 9日号, P.59. 參照

주 16. 朝日新聞, 1972年 12月 12日字

주 17. 東亞日報, 1973年 1月 5日參照

주 18. 朝日新聞, 1973年 1月 18日字參照

4. 軍事面

1945年 9月10日 맥아더總司令部는 对日占領政策으로서

- ① 軍国主義의 根絶
- ② 自由民主化
- ③ 經濟非軍事化(軍需産業의 禁止)

④ 經濟民主化를 公表하고 그 政策의 主眼은 日本을 再次 強國으로서 再起시키지 않는 點에 있었다⁽¹⁹⁾ 이 基調아래 制定된 日本의 新憲法은 天皇을 象徴으로 하고 戰爭을 拋棄하고, 戰力を 갖지 않는다고 하는 劃期的인 것으로서 맥아더元帥는 日本이 東洋의 스이스가 되기를 바란 한便 才二次大戰後에는 平和스러운 時代가 到來하는 것으로 予想했지만 現實은 美國의 꿈을 뒤집어 東西의 對立은 深刻化하고 共產攻勢는 世界的으로 擴大하고 極東에서도 韓國動亂이 勃發하여 美國으로서도 百八十度의 政策轉換이 不可避하였다. 그리하여 1948年의 1月6日 美陸軍長官 로알은 日本의 非軍化政策과 日本의 經濟自立化과의 矛盾을 指摘하고 日本의 復興이 日本을 共產主義의 防壁으로 삼은 기틀이라고 指摘하였다.⁽²⁰⁾

韓國動亂勃發로 因한 駐日美軍의 出動은 日本國內의 治安維持에 不安을 招來하여 맥아더元帥는 1950年7月8日付로 吉田首相앞으로 書面으로서 警察予備隊의 設置를 命令하여 日本政府는 當時의 警察力外에 七万五千名의 警察予備隊를 新設키로한 한便 同時에 海上保安隊를

註19) 上村伸一, 占領, 獨立「新時代」, 時事通信社, 昭和36年, PP.25-26.

註20) 上掲書, P. 47.

倍(一万六千名)로 增強할것을 指令받아 포스담政令(50.8.10)으로
로서 公布하여 即日 実施되었다. (21)

美国은 蘇聯의 意向을 無視해 버리고 对日講和를 이른바 多数講
和(单独講和)의 方式으로 推進할 方針을 세워 1951年 9月에는 对
日講和條約을 締結하고 同時에 美日安保條約을 맺었으니 이로써 日本
再軍備의 基礎가 마련된 것이었다. 특히 美日安保條約前文에는 「直
接 및 間接侵略에 대한 自國의 防衛를 위하여 漸進적으로 独自の責
任을 負擔할 것을 期待한다」라고 明示하여 日本의 再武裝을 美国이
保障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1954年에는 既存 「保安隊」가 「自衛隊」로 轉身했으며
保安庁은 防衛庁이 되고 1956年 7月에는 「国防會議」가 兪足되었는
데 이 會議는 日本国防의 基本方針을 세우고 防衛計劃의 大綱을
決定하여 決定된 防衛計劃에 關聯된 防衛産業등의 調整計劃大綱을 劃
定할 뿐 아니라 「防衛出動」의 可否를 審議하고 国防에 關한 重要
事項에 관하여 必要에 따라서는 內閣首相에게 諮問하는 機構이다.

이러한 一連의 措置들이 끝나자 1958年부터는 本格的인 防衛力整
備計劃에 突入하였으니. . . 才1次防衛力整備3年計劃(1958 ~ 1960)
才2次防衛計劃(1962 ~ 66), 才3次防衛計劃(1967 ~ 71)을 거쳐
才4次防衛計劃은 1972年부터 1976년까지의 5個年計劃인데 5兆8
千億圓(日貨)이란 莫大한 予算이 投入되고 있으며 이 計劃이
完成되며는 核武裝만 없다 뿐이지 日本은 實質的인 軍事大國이 되는
것이다.

註21 : 上揭書 P 54.

또한 注目할 現象의 하나는 이른바 産軍複合体现象이 進展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日本의 軍需産業 및 兵器工業의 復活을 위한 契機는 韓國動亂때 비롯한 美國의 特需發注에 始作된 것이었다. 그런데 韓國戰爭이 끝나자 戰爭中 直接 美軍과 特需契約關係에서 存立해온 生産業체와 그 下請企業들은 大打擊을 받게 되었다. 1954年 3月에는 發足한지 얼마 안되는 「經濟團體連合會防衛生産委員會」가 防衛生産體制整備에 關한 要望事項을 發表하고 政府에 그 實施를 促求하였는데 그 中에서 특히 日本의 防衛生産體制整備目標로서 自衛隊의 必要裝備의 生産과 極東·東南아시아地域 自由主義國의 裝備更新과 消耗武器 彈藥補充이라는 두가지 需要面을 考慮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어 결국 武器輸出市場問題까지를 고려하는 점에서 注目된다.

才2次防年間に 要請된 「裝備國産化」는 産軍複合體成長을 위한 좋은 契機를 提供하였다. 1962年부터는 美國의 對日軍事援助가 事實上 中斷되는 方針決定에 따라 이때까지 美軍의 特需發注에 의하여 지탱해온 兵器工業界는 景氣不況에 直面하게 되어 「經濟團體連合會」는 「防衛裝備國産化懇談會」라는 것을 만들어 活氣를 되찾는 役割을 하였으며 以後 財界 産業界는 共同戰線를 形成하여 政府로 하여금 「國産化」라는 名分下에 軍需産業膨脹을 斷行하도록 促求하였다.

日本의 核武裝可能性 與否는 오래동안 論難되어온 問題이지만 이른바 「非核三原則」에 의하여 당장의 核武裝은 政策的으로 禁止되고 있고 또 核에너지는 「平和目的」利用을 위한 開發만을 大義名分으로 삼고 있으나 核을 保有할수 있는 모든 底力을 갖고 있는 만큼 國

内外情勢의 變動如何에 따라서는 核武装의 可能性도 充分히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22)

어쨌든 76년까지 日本의 소위 「自衛力」이라는 군사력은 美·蘇·中共, 英, 仏, 西獨에 다음가는 세계제7위를 점하게 되리라는것 23)은 分明하며 國際關係를 支配하는 主要原因中の 하나인 軍事力과 經濟開發의 原則 23)에 비추워보고 또한 1970年8月24日 칼포르니아洲의 생크라멘트에서 어느 美國政府要人の 外交政府說明에서 밝힌대로 日本에는 軍國主義가 復活할지도 모를 24)일이 日本은 軍事面에서 N-2体系下에 있다고 하며 日本自衛隊의 現在火力은 旧日本軍의 威容이 頂点에 達했던 1942年경의 火力보다 7倍 또는 8倍나 強하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 25) 비밀리에 戰略미사일을 一擊으로 격추시킬수 있는 테이저무기를 用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6) 北海道의 야구모군이 日本防衛庁에 의해 地對空 나이크 미사일을 설치할 有望한 基地로 검토되고 있다고 防衛庁 소식통이 밝힌바 있으며 27) 最近 알려진바에 의하면 美國은 日本에 對하여

註22 :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日本의 突態對外政策 및 對韓政策과 韓國安保를 위한 對日戰略模索, 国土統一院 1972. PP. 18-21參照

註23 : 中央日報 1972年10月13日字 參照

註24 : 한국외국어대학 부설, 소련 및 동구문 제연구소, 蘇聯의 突態對外政策 對韓政策과 韓國安保를 위한 對蘇戰略模索 국토통일원 1972. P. 121

註25 : 世界週報, 1970.9.20号, 9.16. 大韓일보, 1973年1月6日字 「렐국스」參照

註26 : 경향신문, 1973年1月4日字 參照

註27 : 조선일보, 1973年1月11日字 參照

쉽사리 攻擊用大陸間 미사일로 改造할수 있는 한 미사일發射體 全部를 輸出하고 있다²⁸⁾ 이러한 一連의 움직임은 아시아에서의 美國의 轉身이 日本이 되지 않을까 予料할수 있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

以上에서 日本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面에서의 現況을 살렸거니와 日本은 아시아에서 唯一한 自由國家²⁹⁾며 GNP에서 世界 才三位를 자랑하는 經濟大國으로서 通常武器에 의한 局地戰을 自主적으로 対処하는 戰力의 整備³⁰⁾를 目標로 출달음치고 있으며 今年 2月 14日에는 日本을 訪問한 UN事務總長에게 UN의 安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으로 加入해 주기를 正式으로 要請한 事實³¹⁾이 있는바 現常任理事國의 모두가 核保有國임에 비추어 日本의 그核武装與否의 論議는 큰 関心事로 되어있던 것인데 급기야 日本政府는 15日 日本의 平和憲法이 「他國에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어를 위한 目的의 核武器일 경우」 日本이 그같은 소규모의 核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核무기 논쟁에 대한 정부의 종합된 견해를 밝히므로써 核보유合法化³²⁾로 落着되었으니 特

註28) 경향신문, 1973年3月7日字 参照

註29) 東亞日報 1973年1月19日 TNYT 報道, 自由비교조사」 参照

註30) 東亞日報 1972年10月16日字 社說参照

註31) 每日新聞, 1973年2月14日字 参照

註32) 朝鮮일보 1973年3月16日字 参照

히 軍事的인 政治路線이 무엇인지?를 쉽게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33) 즉 몇사람의 미국인이 日本은 1975年까지에는 核폭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34) 것을 能히 首肯할수 있겠다.

즉 비록 日本이 列島改造論의 副作用이 심각하고 地価暴騰에 物価도 덩달아 田中内閣이 鎔足한지 1년도 못되어 日本의 政.財界에는 現内閣의 短命說이 나돌고 있다지만 日本政府는 美國이 장차 新貿易法을 제정, 日本商品에 特別輸入附加稅를 부과할 경우 日本은 現在의 貿易自由化計劃을 전면 中止하고 對美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大藏省관리들이 말할 36) (73.3.24) 程度로 強國임을 誇示하고 있으며 곁들여 「닉슨」독트린의 추진과 美日安保條約 再檢討論이 제기되면서 美國은 「日本의 방위는 日本의 손에」 「아시아의 다른 地域에 있어서도 美國의 방위 책임의 일부를 日本의 손」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완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註33) 日本의 軍事面에 對한 詳細는 ① 김영준, 日本의 才4次방위력 정비 계획 분석과 한일군사적지역협력체제전망, 국토통일원 1971 과 ② 日本의 軍國化可能性診斷, 国土統一院, 1972, 를 參照 바람

註34) 존, K, 에머슨, 日本のデレンマ, 世界週報, 1972年8月8日号 參照

註35) 경향신문 1973年2月19日字 參照

註36) 경향신문, 1973年3月26日字 參照

日本の 국제적 위치가 크게 변동됨에 따라 그에 相應해서 軍事的인 側面에서도 完全獨立國家의 能力과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核무기의 생산, 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美·日間 또는 政府當局者간에 암암리에 묵인 되어가고 있는것 같아 具體的으로 지난 20日(1973.3)에는 日本政府의 立場이 더욱 강해져 「憲法이 허용하는 核兵器를 보유하는 內閣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憲法을 확대 해석하면 「조만간 核武装을 할수 있다」는데 까지 에스킬레이트 되었다³⁷⁾ 따라서 지난 10日(1973.4) 「마셜그린」 美國 務次官補의 「日本이 核武装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³⁸⁾ 라는 予想을 失色케 할는지도 모른다.

註 37) 경향신문 1973年 3月 26日 字參照

註 38) 中央日報, 1973年 4月 11日 字參照

II . 日本의 對外政策方向

I . 日本의 對外政策路線

일찍이 佐藤首相은 그의 施政演說에서 (1970年1月14日) 現在 우리들은 日本의 歷史上 翻期的인 時점에 스고 있다. 이제 부터는 日本의 国力이 世界에 對해서 前例없는 무게를 갖는 時代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야말로 모방 추종의 時代는 가고 우리는 他國을 目標로 함이 없이 스스로의 目標를 設定할 時代로 되었다고 말한다. 國際的課題로서는 國力·국정에 따라서 자위력을 정비하여 그 不足되는 것을 美日安保條約에 의해 補完하고 國際秩序의 形成에 努力해야 하며 經濟의 國際化에 賢明하게 대처하는 한편, 援助와 貿易의 兩面에서 開發途上國의 自助의 努力을 도와야 하며 그 큰 部分은 아시아로 向해야 된다고 하고 美國과의 關係는 다른 어느나라와의 關係보다 중요하다. 이 認識下에 太平洋新時代에 맞는 새로운 美日關係를 만들기 위해 加一層의 努力이 必要하다. 日蘇關係는 親善友好의 關係를 一層 活潑히 해서 平和共存의 關係를 擴張해야 한다. 最大의 懸案問題인 北方領土問題는 今後라도 끈기 있게 우리의 正當한 要求를 主張 解決해야 된다. 中共과는 經濟 文化 報導面의 交流와 接觸을 緊密하게 推進해야 된다. 고 하여 日本의 對外政策指標를 提示하였다.

또한 日本外務省이 發表한 1972年度 「外交青書」에 依하면 外

註1) 毎日年鑑, 70年代의 日本, 1971年版, P. 122 參照.

交政策의 基調를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2) 첫째 基本指針으로서 多極化가 單純히 現象面에서의 變化로 그칠 것인가 또는 質的인 變化인가를 우선 明確히 觀察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實質的인 變換現象으로서의 多極化를 認定하는 基礎위에서

◦ (1) 從前以上으로 外交活動의 幅을 넓히고 多様な 選擇을 갖는 한편 (2) 國際的인 期待에 應하여 더 한층 慎重한 責任있는 行動을 取하는 同時에 (3) 世界에 있어서의 獨特한 地位와 能力의 限界를 바로 認識해서 國家利益이 무엇인가를 冷靜하게 判斷하므로써 節度 있는 外交活動을 取한다[◦]는 것을 基本方向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基本方向에 따라서 諸外國과의 關係를 增進한다는 것인데 그 要旨은 對美關係에 있어서 첫째 自由 無差別을 理念으로 한 國際貿易體制에 對한 美國의 支援를 獲得하고 . 둘째, 美國의 核抑制力을 包含한 綜合戰略에 依存하므로써 美·日安保體制를 堅持한다. 는 것이며, 對中共關係에 있어서는 日·中共關係의 正常化를 早速히 推進한다는 것이다 한편 對蘇關係에 있어서는 첫째, 善隣友好關係를 推進하고 둘째, 72 年中에 平和條約의 締結을 交渉하는 同時에 北方領土 即 齒舞(하보마이), 色丹(시코땅), 國後(크나시리), 択捉(에트로프)의 諸島에 對한 返還을 實現시킨다는 것이다. 對아시아關係에 있어서는 아시아 諸國의 多大數가 開發途上國으로서 貧困의 克服이 最大課題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서 充分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留意하여 今

註2) 崔敬洛, 美蘇, 中共의 3角關係와 日本, 國防研究, 才15卷 才1号 号, PP. 125 ~ 126.

後 더 한층 援助를 增大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의 重要な 役割로서 軍縮의 達成이 있는데 今後에도 日本은 機會가 있을때 마다 軍縮의 促進에 努力하고 特히 核保有 國에 對하여 核軍縮의 履行을 強力히 要請해 나간다는 것이며, 더 한층의 經濟協力을 擴充·強化하므로써 日本의 長期的 國家利益의 確保와 聯結되는 南北問題의 解決에 寄與한다는 것이다.

前記 日本外交政策의 基調를 分析해 보면 今後의 日本外交는 첫 째, 外交活動의 大幅的인 擴張, 둘째, 多様な 外様な 外交選擇權의 行使, 셋째, 國家利益 優先에 依한 對外行動을 取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日本外交의 3原則은 처음으로 設定된 것이다.

即 1971年度の 基本指針은 ◊ 이제 日本은 國際社會에 있어서 要求하는 立場으로 부터 賦與하는 立場으로 客体로 부터 主体로 移行해 가고 있으며 日本의 決意와 行動은 世界의 大勢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칠수 밖에 없는 相互協力關係를 推進하고 彼此間 利害의 綜合的인 均衡點을 覓見하므로써 長期的이며 大局的인 國家利益의 伸長을 圖謀하는 것이 必要하다. . . . 國際社會의 既存秩序 및 均衡을 急激히 무너뜨리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外交努力을 着實히 쌓아 올려 나가는 것이 日本의 경우 特히 必要할 것이다³⁾ 라고하여 相當히 조심스럽게 外交의 方向을 規定하고 있는데 反하여 1972年の 基本指針은 3原則을 提示하므로써 이 3原則에 立

註3) 日本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 昭和46年版(才15号),

PP. 77-78 을 前掲, 國防研究, P. 126

脚한 外交를 遂行하는 것이 對內外的으로 要望되고 있다는 것을 明히 하고 있는 점이 特異하다. 이것은 名實· 共히 對美追從外交라는 從來의 對外活動 行態로 부터 脫皮하여 美國과 對等한 地位에서 独自の인 自立外交路線을 取하겠다는 劃期的인 外交宣言으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今後 日本의 外交活動은 幅이 넓고 多樣하게 展開될 것은 明白하다 또한 諸外國과의 關係 增進面에서 볼때 對美關係에 있어서 ◊ 日本의 오늘날의 繁榮은 自由無差別을 理念으로 하는 國際貿易體制가 招來한 利益을 享受하게 된 結果로 볼수 밖에 없는데 이 體制를 最大로 支撐해 준 것은 美國임 ◊ 을 強調하므로써 特히 日本에 對하여 保護主義傾向에 흐르고 있는 美國의 對日經濟政策의 是正 腕曲히 要求하고 있는 점과 한편 對蘇關係에 있어서 對蘇平和條約 締結을 위한 交渉時期를 72年中이라고 明記하는 同時에 日本 固有의 領土로서의 北方 4個島의 返還 實現을 圖謀한다는 것을 明白히하고 있는 점이 例年과 다르다. 이 두가지 점은 外貨保有高面에서 1972年 10月末 現在 西獨의 187億달러 다음가는 178億달러를 示顯하고 있는 日本의 巨大한 經濟力이 軍事的 超強大國인 美國(132億달러에 不過)과 소련에 對하여 自信있는 態度로 나올수 있는 基盤이 되어 國家利益 優先에 依한 外交活動의 첫 焦點을 美國과 소련에 맞춘 것으로 分析된다. 이것은 近來 日本에 抬頭되고 있는 「新民族主義」外交가 實際로 行動에 옮겨질 展望이 漸次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評價할수 있을 것이다 4)

註4) 上掲 國防研究院 PP 126-127 參照

上記 評価와 함께 新政權樹立後에 議會에 낸 政府答辯書 其他 田中首 大平外相이 美日頂上會談 및 日中頂上會談을 치르고 行한 記者會見內容을 參考하여 新政權의 外交基調로서 重點的 關心을 綜合 要約하면 이러하다.

- 一. 共存과 平和競争속의 「對立과 對話」 關係調整에 副應
- 二. 緊張緩和에 의 모색
- 三. 外交活動의 振幅擴大 및 多樣化. 이는 日本이 장차 「종래 이상으로 外交活動의 폭을 넓혀 多樣의 선택권을 가질수 있다는 點을 暗示하고 있다. 따라서 國際的 狀況의 變化에 適宜副應하면서 점차적으로 外交的 獨自路線을 實踐遂行할수 있는 素地 마련을 爲해 外交活動의 振幅을 擴大할 것이라고 意味로 받아들여진다.
- 四. 美日安保体制의 繼續 維持 및 協力增大라는 테두리 內에서
- 五. 中共과의 國交回復 關係正常化 增進
- 六. 對蘇友好協力關係增進 및 北方領土問題交涉 平和條約締結推進
- 七. 對韓友好協力關係維持의 發展增進을 基底로 한 「條項의 國際情勢의 推移를 勘案」하여 이른바 對南北韓等 距離外交 座標를 내걸고 있다.

위와 같은 外交政策 基本路線에 따라서 個別政策을 再調整해 가는 마당에 있거니와 5) 특히 對美關係 對蘇關係 및 對中共關係를 日本外交의 當面課題에 焦點을 모아 論及하겠다.

註 5) 金洪喆, 日本의 아시아戰略 再編成方向, 政經研究, 1972年11月 号 P.137 參照

2. 日本外交의 当面課題

戰後의 日本外交는 日·中 國交正常화가 實現된 9月29日까지 事實上 「쎄프란시스코」體制에 묶여서 自主外交를 遂行하지 못했다 「쎄프란시스코」體制는 (1) 「쎄프란시스코」平和條約(1951年9月8日調印)에 依한 西方陣營과의 單獨講和 (2) 美·日安保條約(1951年9月8日 才1次 美·日安保條約 調印, 1960年1月19日 改定 美·日安保條約 調印, 1970年6月23日 以後 自動延長)에 依한 駐日 美軍의 駐留 繼續 (3) 台灣을 中國의 正統政府로 認定한 日·華平和條約의 締結(1952年4月28日調印)(4) 韓國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고 兩國關係의 正常화를 이룩한 韓·日間의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 締結(1965年6月22日調印)의 4個支柱로 成立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첫번째의 西方陣營과의 單獨講和는 이미 鳩山(하토야마)內閣이 日·蘇共同宣言을 1956年10月19日 모스크바에서 締結하여 日·蘇關係의 正常화가 實現되므로서 무너졌고 1972年9月29日 日·中共間의 戰爭狀態 終結의 實現과 平和友好條約 締結에 同意한 日·中共 共同聲明이 發表되므로서 結果적으로 西方陣營과의 單獨講和 狀態에 終止符를 찍고 東·西兩陣營과의 全面講和가 成立된 셈이다. 結局 台灣을 中國의 正統政府로 認定한 日·華條約이란 또 하나의 ❖기둥❖이 무너진 것이다. 또한 台灣을 中共領土의 一部라고 事實上 認定하고 그러한 認識下에서 볼때 美·日安保條約 才4條의 極東條項에서 台灣地域을 防衛範圍로 設定하고 있는 美日安保條約 體制의 一部分의 變更은 不可避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남은 것은 韓·日關係뿐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4개의 支柱로 된 「샹프란시스코」体制은 美国의 对아시아政策의 主軸으로 마련되었고 日本은 그러한 美国의 对아시아政策을 追從하기만 하면 되었다. 소련과 国交回復을 成立하게된 背景이 对内的으로 日本이 經濟復興을 達成한 것도 있지만 日本의 UN加入을 必要로한 美国이 蘇聯의 拒否權行使로 加入이 表現되지 못하고 있는 点에서 日·蘇共同宣言에 依한 国交回復을 暗黙의 諒解를 한것이 決定的인 要件이 된 것이다. 反對로 蘇聯으로서는 日本과 外交關係를 갖고 보다 더 가깝게 接近하므로써 日本으로 하여금 美国으로 부터 멀리하게 할 可能性을 考慮하였을 것으로 본다. 어쨌든 日·蘇間의 国交正常化 實現은 美国의 諒解없이는 相当히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 日本外交는 美国에 对한 追屬性을 脫皮하지 못한대로 70年代를 마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日·蘇国交回復의 경우와는 달리 日·中共 国交正常化의 實現은 「닉슨」大統領과 田中首相間의 「하와이」会谈이 田中首相 訪中前에 開催되었다고는 하지만 特히 台湾問題에 있어서 美·中共 共同声明에서는 美国이 避한 〃中共이 中国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承認〃하고 또 1972年9月29日부터 外交關係를 樹立할 것을 決定한 日·中共 共同声明을 發表하므로써 美国의 对中共關係보다 日本이 앞질렀다는 点에서 自主外交로의 才1步를 더딘것으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日·中共 共同声明의 發表를 契機로 한 日本의 自主外交路線의 課題를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6)

註6) 上掲 國防研究 PP 128-132 参照

가. 對美外交政策上의 課題

(1) 오끼나와 返還後의 美軍基地使用問題

「오끼나와」는 1972年5月15日 日本에 返還되었다. 이로써 「오끼나와」에 있는 美軍基地도 美日安保條約 才6條의 事前協議의 對象이 되었다. 現在 日本本土內에는 「닉슨·독트린」에 依한 美地上軍의 撤収로 岩國(이와꾸니)의 海兵旅團基地를 除外하고서는 地上兵力은 없으며 航空兵力도 戰鬥爆撃機部隊가 三沢, 橫田基地로 부터 撤収하여 所謂 有事駐留體制로 되어있다. 그러나 「오끼나와」의 美軍基地는 13個基地만을 日本에 返還하였을 뿐이다. 美國은 「오끼나와」基地의 戰略的 價値를 極東의 集團安全保障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는 最低限의 抑制力은 發揮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1年 3月末에 發表된 美國務省 外交年次報告에서 美國은 오끼나와의 施政權은 拋棄하지만 오끼나와의 主要 軍事基地(核武器를 貯藏하는)을 維持하게 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美·中共接近의 現實的인 것이 되고 美·中共의 和解條件으로서 台灣의 駐屯美軍과 軍事施設을 漸進的으로 縮少할 것을 中共에게 約束한 以上 台灣으로 부터의 美軍撤収는 이제 時間問題인 것은 明白하다. 이와 關聯해서 「오끼나와」로 부터의 美軍撤収가 越南戰 終結과 具體的인 美·中共 國交正常化의 條件이 될 可能性은 크다. 따라서 日本自衛隊에 依한 美軍基地使用의 交替問題는 앞으로 對美關係에 있어서 重大한 課題가 아닐수 없다.

(2) 美·日安保條約의 繼續 堅持

台灣을 中共領土의 一部로 認定한 日本政府로서는 美國이 台灣防衛約束을 지키기 위해서 美·日安保條約 第6條의 事前協議條項에 依해서 日本本土와 「오끼나와」의 美軍基地로 부터의 海·空軍의 進出에 關하여 日本政府에 事前諒解를 求하였을때 이에 應할 수 없는 立場에 놓여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美·日安保條約을 繼續 堅持해 나갈 것인가하는 現實面에서의 調整問題가 큰 課題로서 남아있는 것이다.

(3) 自由無差別을 基盤으로 하는 國際貿易體制의 施行要求

日本の 對美貿易黒字는 1972年度에 40億달러에 達할것 같다⁷⁾ 美國은 이러한 貿易逆調를 是正하기 위해서 纖維 電氣製品 및 自動車等 日本の 主要對美輸出品에 對한 關稅引上 및 輸入制限과 「덤핑」提訴等으로 特히 對日 平護貿易主義를 強化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은 美·日國民間에 相互不信感을 쌓트게 하고 經濟界에서는 美·日間의 經濟戰爭이 일어났다는 評價마저 나오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美·日間 經濟關係는 日本の 自由無差別을 基盤으로 하는 國際貿易體制의 施行要求를 美國이 어느程度로 받아들일 것이며 한편 田中首相이 言明한 것처럼 美·日間의 貿易逆調를 20億달러 線으로의 抑制가 實踐될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註7) 朝日新聞, 1973年1月1日字 參照

나. 對소外交政策上的 課題

(1) 日·소平和條約의 締結과 北方領土의 返還交渉

1972年 1月 「그로미코」소련 外相의 日本訪問은 소련의 對日, 對中共等 距離外交의 出發을 뜻한다. 소련의 對日接近의 動機가 中共을 意識하여 日·中共 國交正常化의 急進展을 牽制하고 日本을 소련外交의 補強에 活用하려는 것이며 日本의 經濟力을 經濟不振의 打開策으로 利用하고 長期的으로는 美·日關係에 못을 박아 놓자고 하는 것인데 日本이 이러한 好機를 놓칠리가 없다. 日·中共 共同聲明으로 國交正常化로의 길을 트인 直後 日本政府는 大平外相을 소련에 派遣하여 平和條約의 締結과 北方領土의 返還에 關한 打診을 한바 있다. 北方領土의 返還問題는 日·소間의 커다란 課題로 懸留中인데 1956年 12月 12日에 發効한 日·소共同宣言 第9項에서 “소련은 日本國의 利益을 考慮하여 齒舞群島 및 色丹島를 日本國에 引渡하는 것에 同意하면서 “但, 이들 諸島는 日本國과 소련間의 平和條約이 締結된 後에 現實的으로 引渡하도록 한다”는 留保條項을 挿入하므로서 소련은 對日關係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有利한 立場에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 共同宣言에 따르면 設使 日·소間에 平和條約이 締結된다 하더라도 國後(크나시리)와 択捉(에토로프)의 兩島는 返還될 수 없는 結果가 된다. 그러나 日本으로서는 平和條約締結과 함께 北方의 4個島를 一時에 一括的으로 返還되도록 하겠다는 것에 對소外交政策上的 課題가 되고 있다.

(2) 시베리아 共同開發과 樺太海城 大陸棚의 共同開發

이미 日本政府는 시베리아의 共同開發 特히 「츄메니」油田 開發을 위하여 日·소合同經濟委員會에서 10億달러의 經濟援助를 提供할 것을 承認하였다. 앞으로 樺太海域 大陸棚의 海底油田開發을 위하는等 對소經濟援助를 增加하게 될 것인데 日本으로서는 이러한 對소經濟援助를 提供하는 대신에 소련으로부터 받을 報酬을 北方領土의 返還에 두고 있다는 점을 考慮할때 日·소共同開發과 經濟援助의 提供은 對소外交政策上的 政治的課題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다. 對中共外交政策上的 課題

(1) 日·中共 平和友好條約의 締結

1972年 9月 29日의 日·中共 共同聲明 第3項에서 日·中共의 兩國政府는 兩國間의 平和友好關係를 強固히 하고 發展시키기 위해서 平和友好條約의 締結을 交渉할 것에 合意하였다. 同時에 大使館의 設置와 大使의 交換도 決定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對中共交渉을 어떻게 進行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美國과 소련을 考慮할때 하나의 課題가 되고 있다.

(2) 尖閣列島의 領有權問題 및 東友邦海大陸棚 石油資源의 共同開發

尖閣列島는 北緯 25度 40分~26度, 東經 120度 20分~12度 45分間에 散在하는 東友邦海의 5~6個島로된 島嶼群인데 無人島이다.

日本外務省은 1895年 1月 14日의 閣議 決定에 依해 日本領土로 編入 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그마한 島嶼群이 日本, 自由中国 및 中共間에 領有權을 主張하게된 原因은 島嶼周邊의 大陸棚에 埋藏되고 있는 石油의 埋藏量이 10 億㎤를 넘는 莫大한 量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以後이다. 自由中国은 이미 1971年 7月 尖閣列島를 包含하는 大陸棚의 石油 鉅區權을 美国「갈프」石油会社에 賦与하고 今年 2月初에는 同列島를 台湾省宜蘭縣에 編入시켜 버렸다. 한편 中共도 1971年 12月 30日 이 列島의 領有權을 主張하기 始作하였다. 即 이 列島의 最初의 發見者는 中国人이며 16世紀以後 中国의 領土라는 것이고 淸·日戰爭後 下關條約에서 日本은 淸朝政府로부터 奪取하여 第2次 大戰後 一方的으로 美国에 引渡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尖閣列島의 歸屬問題는 앞으로 自由中国의 國際的 힘을 漸次로 喪失하면서 日·中共間의 係爭問題로 繼續될 것은 確實하다.

(3) 自由中国과의 經濟關係의 持續

日·中共 共同声明의 調印式後에 大平外相은 “日·華條約은 日·中共 國交正常化에 따라서 存続意義를 喪失하고 終了되었다”고 하므로써 日·華條約의 失効를 宣言하고 日·自由中国間의 關係의 中止를 發表하였다. 한편 自由中国外務省도 同日字로 對日斷交宣言을 發表하였다.

이와같이 日·自由中国間에 國交가 斷絶되고 兩國의 大使館이 廢鎖되었지만 日本政界 特히 自民黨의 元老層에 있어서 뿌리 박고 있는 自由中国 支持者들에 依해 兩國間의 交易關係의 持續이 強力히 要望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中共의 눈치를 살피가면서 往復 7 億 6,740 萬달러에 達하는 日·自由中国의 交易을 어떻게 持續시킬

것인가 하는 하나의 課題가 되고 있다.

라. 對韓半島外交政策上的 課題

(1) 對韓國과의 關係

(가) 對韓 經濟協力の 繼續

中共과 國交正常화를 이룩한 日本政府는 中共과 關係가 깊은 北韓에 對한 配慮를 完全히 排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이 形成되기 以前인 지난 9月4日부터 6日까지 2日間に 걸쳐 서울에서 開催한 韓·日定期關係會議에서 約 1億7,000萬달러에 達하는 圓借款에 依한 經濟協力を 約束받은 것은 韓國外交의 勝利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政府水準의 協力이던 民間水準의 協력이던간에 中共과 北韓과의 關係에서 어떻게 遂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日本으로서는 課題임에 틀림없다.

(나) 輸出市場으로의 確保

日本の 對韓輸出額은 1971年度에 8億5,570萬달러로서 美國 다음가는 黃金輸出市場으로 되어 있다. 이 對韓輸出額은 해마다 增加되고 있는데 北韓接近 및 中共市場으로의 進出에 影響을 받지 않고 繼續 確保하는 것이 앞으로의 課題로 提起되고 있다.

上記日本の 對韓 經濟關係에 對해 最近 워싱턴 포스트紙는 "美國政府는 한때 日本の 漸增하는 對韓經濟介入을 韓國에서 물러나는 美國의 役割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이는 "美日關係가 冷却된 때문일뿐 아니라 그들의 對韓借款이 韓國의 經濟問題를 惡化시켰기 때문"이라

고 지적한바 그밖의 주요내용은

① 과거 日本植民地統治下에서 살았던 韓國人の 70%가 아직 日本이 韓國에 대한 위협적인 存在라고 생각하고있다.

② 아시아에서 台灣을 除外하고 韓國처럼 日本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國家도 없다.

③ 公式的인 對韓投資에 있어서는 美國이 1億8千萬달러, 日本이 1億2千8百50萬달러로 美國이 우세하지만 合作投資件數로 보면 日本이 286件, 美國이 120件으로 日이 훨씬 우세하다. 技術援助契約 197個 가운데 141個가 日本과 關聯되어 있다.

④ 이밖에 노출되지 않은 비공식 對韓投資를 합치면 全體的인 日本의 對韓直間接投資는 7億7千5百萬달러이다. 總資産 10億4千5百萬달러에 상당하는 韓國企業들이 그들의 原料·施設 附屬品을 日本에 依存하고 있다.

⑤ 韓國에서 輸出되는 商品中에는 保稅加工되어 日本商品으로 되기 때문에 "韓國의 이러한 對日依存度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는 日本이 日本보다 賃金이 平均 6分の1이나 싼 韓國에서 그들의 商品을 組立하고 있기 때문이다.

⑥ 日本貿易界는 日本과 北韓間의 貿易이 앞으로 5年안에 지금의 5千7百萬달러에서 3百9千7百萬달러로 크게 增大될 것으로 予言하고 要컨대 日本資本 및 援助에 韓國이 지나치게 依存하고 있는 弱點이 韓國政府에 政治的인 負擔이 되고 있다고⁸⁾ 指摘했는

註8) 서울新聞 1973年3月1日字參照

데 中共이 이른바 「周4原則」을 廢棄하므로써 日本企業의 韓国進
출을 위한 條件은 새로운 次元에서 前例없이 成熟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바⁹⁾ 워싱턴 포스트의 指摘은 韓國에게 實感있는 檢討
對象이 될것 같다.

(다) 獨島의 領有權問題

韓·日間에 있어서 獨島의 領有權을 둘러싼 爭論은 解決
할 수 없는 兩國間의 課題로 繼續될 것이다.

(2) 對北과의 關係

(가) 政府水準에서의 對北韓關係 改善摸索

日本政府는 政府水準에서의 對北韓關係改善을 表面하지 않
고 있다. 田中首相이나 大平外相은 對韓國과 對北韓의 等距離外交
를 遂行할 用意가 없음을 公式적으로 여러번 表明한바 있다.

이러한 政府의 立場과는 달리 社會黨과 公明黨등 野黨은 北韓을
往訪하면서 北韓과의 關係를 가질 것을 自民黨政府에 強力히 要求
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미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 및 日·朝貿易會와 北韓國際貿易促進委
員會間에 貿易促進에 關한 合意書가 1972年 1月 23日 調印된바 있
으며 또한 日·韓友好促進議員聯盟 代表團과 北韓 對外文化聯絡協會
代表團間에 國交正常化를 早速히 實現한다는 主旨의 共同聲明을
1972年 1月 25日 平壤에서 發表하였다.

이와같은 野黨과 自民党内左派에 依해 크게 影響을 받고 있는

註9) 京郷新聞, 1973年 3月 9日 社說 參照

것은 事實이다.

뿐만 아니라 經濟界의 對北韓 積極接近은 日本政府에 先行하여 推進되고 있는 形便이다. 即 三井銀行을 비롯한 住友, 日本興業, 三和, 神戶, 埼玉, 東海, 大和, 北海道拓殖等 9個 主要外國換銀行그룹이 지난 8月20日 北韓의 朝鮮貿易銀行에 總額 2億달러程度의 銀行間借款 提供에 關하여 具體的인 檢討를 始作하였고 10月24日에는 新日本製鐵이 北韓에 對하여 鐵鋼一貫製鐵所의 設備一式과 製鐵所建設技術을 輸出할 方針을 굳히고 大同江河口邊에 浦項綜合製鐵所以上의 規模의 製鐵所를 建設하기 위한 北韓側과의 基礎的인 打合을 끝내 놓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10月26日에는 日本經濟団体聯合會 副會長인 土光敏夫 東芝會長等 經団聯 首腦障과 金錫鎮 北韓國際 貿易促進委員會 副委員長間의 貿易擴大를 中心으로한 會談이 開催되었다. 이와같은 經濟界의 對北韓經濟關係의 修正動向에 對하여도 크게 影響을 받고 있다. 따라서 日本政府로서는 日本輸出入銀行의 融資를 承認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것이 今後의 커다란 課題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나) 貿易의 增進

年間 5~600萬달러에 不過했던 日·北韓間貿易은 72年度에는 大幅的으로 伸長하여 1億3千1百75萬4,000달러의 貿易高로서 71年對比 2.3倍가 늘어났다. ¹⁰⁾

註10) 한국일보, 1973年 2月 20日字參照

이것이 73년에는 2億5千萬달러에 達할것이라는 것이다. 11)

繼續中인 商談에서 特히 눈에 떠는 것은 플랜트類로서 三井東洋化學의 尿素플랜트, 東京芝浦電氣의 發電플랜트, 日野自動車의 自動車플랜트等 總額 數10億달러에 達하고 있다. 그런데 北韓이 外交不足이 큰 障礙가 되어 있기 때문에 日本의 經濟界에서는 銀行間借款과 日本輸出入銀行의 融資를 承認하도록 日本政府에 壓力을 加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러나 日本政府로서는 이 問題가 單純한 經濟的課題로 看做하기 보다는 오히려 政治的 課題로서 慎重하게 取扱하고 있다.

그러나 注目해야 할 것은 日本政府는 73年下半期에 日通産省駐在員 2名을 平壤에 常駐¹²⁾ 시킬方針으로 알려졌으며 北韓等 共產國으로부터의 輸入을 抑制하기 위한 事前許可制를 廢止키로 方針을 樹立한것과¹³⁾ 함께 太平外相은 플랜트延拓輸出에 다른 輸出入銀行資金의 使用을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하겠다¹⁴⁾고 言明하여 急作히 政府水準의 對北韓緩和傾向이 活潑해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3. 美·蘇·中共의 動向과 日本의 向背

가. 美國의 動向

「포스트·베트남」時代에 先決을 要하는 遺産이 4強의 理解가 微妙하게 얽혀들고있는 東北亞라면 美國은 이 地域問題解決을

註11) 中央日報, 1973年1月4日字參照(72年度比 80%增加)

註12) 中央日報, 1973年1月18日字參照

註13) 한국일보, 1973年1月14日字參照

註14) 조선일보, 1973年1月14日字參照

철저한 強国外交를 통해 試圖하려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美·日·中共·蘇등 4 強國의 相互均衡을 꾀함으로써 東北亞의 진정한 解氷은 可能하리라는 計算이다. 이러한 強国外交와 아울러 「닉슨」·독트린의 現實적인 實現을 병행시킴으로써 東北亞의 現狀을 固着시키려 들것이라는게 업저버들의 展望이다.

「닉슨」이 2年前에 宣言한 「1.5」戰略概念이 現實적으로 적용될 시기가왔다는 「워싱턴」政界의 주장이 美國의 對아시아 政策方向을 暗示하고 있다. 더구나 東北亞 방위선이었던 日本, 台灣, 「필리핀」의 海上基地를 西太平洋의 「미크로네시아」群島로 後退시킬것이란 소문마저 나돌고 있는것도 수정될 美國外交의 基本立場을 說明하는 것으로 判斷된다. 問題는 中共을 선두로 域內 3強의 均衡을 誘導하려는 美國의 努力에 蘇聯과 日本이 어떤 反應을 보이느냐에 놓여있다. 15)

나. 蘇聯의 動向

「키신저」가 北京에 머물고 있는동안 蘇聯의 官營放送·新聞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어 「美·中共의 새로운 強國政治」를 非難하고 이들 두나라가 「蘇聯에 對한 敵對意識을 深化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공격했다. 비록 美·蘇두超強大國團體制 「닉슨」의 「모스크바」訪問으로 構築되기는 했지만 이들 두強國의 利害가 接合하는 東北亞에 關한 蘇聯은 外交적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美國이 다른 3強사이에서均衡維持를 위한 지렛대의 役割을 하고

註15) 京郷新聞, 1973年3月5日

있음에 비추어 蘇聯은 거의 無力한처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具體적인 화해질서속에서 오히려 깊어가는 中共과의 갈등, 北方領土를 둘러싼 日本과의 協商不振等 蘇聯外交는 表面的으로 갈등을 잡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美國과의 불가피한 友好, 그러면서도 「워싱턴」·北京의 急速度接近이 가져오는 重圧感때문에 蘇聯은 일단 對強大国外交를 凍結시키면서 東南亞 및 東北亞 群小國家와 接觸을 試圖, 이른바 集團安保를 實現하려는게 基本全力인 것 같다. 台灣이 蘇聯에 海軍基地를 提供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最近 「모스크바」를 訪問한 北韓의 黨代表들을 直接 「브레즈네프」가 만나주었다는 報道가 전해진 것도 蘇聯의 微妙한 立場 打開을 위한 努力의 일환이 아닌가 보여진다. 16)

다. 中共의 動向

對美·日關係正常化는 中共의 多目的的인 對外政策結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키신저」·周共同聲明에서 兩國이 連絡事務所設置에 合意한 것이 中共의 立場에서 볼 때 對美關係의 政治的壓力效果를 아울러 가진다는 計算에서 出發한 것일는지 모른다는 과정에서 본다면 中共의 對美立場은 前後 아시아秩序에 대한 美國의 政治·軍事의 介入調整을 노리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中共은 對美關係強化를 圖謀하는 한편 그 過程에서 아시아

註16) 京鄉新聞, 1973年3月5日字參照

전서의 改編을 노리고 있다.

이는 그들나름의 戰略的目的成就라는 效果와 함께 소련勢力の 아시아 특히 西部太平洋地域에 對한 進出을 封鎖할 수 있는 對소 逆攻戰略도 있다. 말하자면 아시아적인 질서를 優先시킨다는 中共 나름의 戰略을 美國과의 勢力配分으로 實現시킬 수 있다는 속셈을 차리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소련이 歐洲에서 美國과의 勢力按配均霑에 의해 현상고정화를 圖謀한것 처럼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美·中共優位秩序確立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東北亞地域에서 日本과 소련勢力の 進出 或은 介入을 현상으로 묶으면서 아울러 4強勢力の 現實的인 調整을 對美關係의 政治的調整範圍內에서 피할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러차례 거듭 確認된 北京側의 對北韓支持聲明에 나타나고 있다. 17)

라. 日本의 向背

72年 9月 日·中共關係 正常化는 戰後 日本의 對美종속지위를 청산한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東北亞地域에 대한 日本의 勢力領域을 保障받았다는 意義를 함께 갖는것으로 評價됐다.

美·日關係의 對等化를 公式化한 日本의 對中共關係正常化 措處는 戰後 對中共勢力封鎖를 內容으로 했던 美·日關係의 質的變化를 隨伴하는 것이며 따라서 日本의 對外政策 다시 말해서 對美·소련·中共等에 대한 政治·外交的인 等距離政策패턴의 國際的 環境을

註17) 京郊新聞, 1973年 3月 5日字參照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日本은 東北亞勢力權形成에 傳統的고 歷史的인 政治的權利行使를 美・中共・蘇 3強에 은연중 示 威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된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비단 韓半島에 限한것이 아니라 中共과의 關係正常化가 갖는 政治的 影響力에 의해 對蘇關係에 自身の 立場을 強化할 수 있다는 속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나카」首相의 「모스크바」訪問說이라든지 對蘇協力を 통한 善意의 제스처로서의 「시베리아」開發參與, 亞細亞國頂上會談등은 日本의 強國入場을 具體的으로 表現한 事例로 볼 수 있다. 가장 緊要적으로 日本의 強國入場을 陽性化시킨것은 日本의 對中共關係에서 찾아진다. 「日本의 軍國主義復活」警告態度를 後退시킨 中共의 對日接近은 東北亞에 對한 日本의 政治的 影響力을 받아늘인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最近 日本의 通商을 통한 北韓에 對한 具體的인 接近態度를 이를 뒷받침하는것이 아닌가 한다. 적어도 日本은 19세기말 以後 持續되어온 韓半島에 對한 美・蘇・中共등과의 勢力均衡性(「발칸」化)으로 계속 保障 받기를 期待하고 있다. 18)

註18) 京鄉新聞 1973年3月5日字參照

III.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1. 日本의 韓半島 介入 政策과패턴

日本의 對 韓半島政策의 基礎적인 패턴을 보면 日本은 언제나 韓半島에서 日本自体에게 威脅을 주는 第3勢力을 排除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 첫째 日本의 對 韓半島定策 構想이 日本은 韓半島에서 日本自体에 威脅을 주는 勢力을 排除하기 위하여 「朝鮮의 自主와 獨立」을 주장하였다. 이 「自主와 獨立」은 韓半島에서 日本의 威脅勢力을 除去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서 韓半島支配를 전제로한 「自主와 獨立」¹⁾ 이었다.

둘째로 이러한 政策展開가 不利해질때는 즉 韓半島에서 日本에게 不利한 勢力을 完全히 排除하기 어려울 때는 「韓半島의 分割政策」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또 이러한 政策이 有利하게 展開될 때에는 다시 말하여 韓半島에서 日本에게 威脅을 주는 勢力 排除의 政策進展이 有利해

惜1) 詳細는 重大 帝國主義 日本과 韓國, 歷史学会編, 韓國史의反省, 新丘文化社, 1969.PP.314~320을 參照

질때에는 「韓半島는 日本의 死活問題」라는 선을 들고 나왔다.

1894年の 淸日戦争當時 日本은 朝鮮이 獨立國의 하나임에도 不拘하고 淸國이 朝鮮을 「屬邦」이라 하여 內政에 干涉하고 朝鮮이 「안으로는 治安을 굳게하고 밖으로는 獨立國의 權威를 維持」할려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對淸 宣傳布告를 하였다. 여기에서 日本이 「朝鮮의 獨立」을 要求한 理由는 明治維新을 前後하여 一時 中斷되었던 韓日 國交를 回復함에 있어서 日本에서는 「征韓論」의 대두 등 對韓政策의 變動을 보여주시는 하였으나 支配의 前提로 結局 韓國을 獨立國으로 남겨두는것이 日本으로서는 우선의 利益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 東北아시아까지 急速히 擴大되어가는 國際社會에서는 韓國을 獨立國으로 한다는 구실하에 淸國의 專權下와 歐美勢力의 壓力의 均衡下에 두는 것이 韓國의 安全保障, 다시 말하여 日本의 安全保障에 緊要한 것이 있으며 日本의 大陸政策의 前提條件이 되기도 했던 것이었다.

다음 1900年初에 露日間の 本格的인 韓半島支配를 다루게될 때 日本은 「韓國의 運命은 日本의 死活」이라는 命題를 들고 나왔으며 韓半島에 어느程度的 자신이 생겼을 때는 韓滿問題不可分이란 觀點에서 韓滿 交換主義를 통한 韓半島의 完全한 支配를 企圖하였던

것이다.

때로 협상과정에서 이것이 不利할 때에는 韓半島 分割政策을 그 협상내용으로 삼기도 하였다.

「38度線分割政策」이 바로 그表現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日本의 對 韓半島政策의 歷史的 展開는 結局 태프트·가즈라協定에서 보듯이 「韓國에 대한 宗主權을 日本軍隊에 의하여 確立한다」고 하는 形式으로 그 끝을 맺어 韓半島가 日本의 「韓半島의 自主와 獨立」 전제였던 「韓半島의 支配」로 들어간 것이었다.

日本의 이러한 과거의 歷史的인 對韓政策의 패턴을 기초로하여 오늘의 對韓政策에 對한 日本的 兪想法의 根拠를 찾아 보기로 한다.

萬一 韓半島가 統一이 된다고 할때 日本은 統一된 韓半島에 對하여 무엇을 생각할까?

또한 韓半島統一 自体에 日本은 어떤 政策으로 臨할 것인가?

韓半島가 現在와 같은 分斷狀態를 벗어날때 즉 하나의 單一體制의 國家가 韓半島에서 形成될 때 日本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의 核心이라고 본다.

單一化란 韓半島의 統一國家가 日本에게 「友好的」인 것일까 또는 「中立的」인 것일까 아니면 「敵對的」인 性格을 띠 것인가 하는 點이다.

日本人의 立場에서 쉽게 다음과같은 結論이 나올 수도 있다.
現時点의 東北亞 國際 情勢하에서는 統一된 韓國에서 日本에게
「友好的」인 性格의 國家가 韓半島에 形成되리라고는 期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統一된 韓半島가 日本에게 友好政策만을 挾하지는 않으리라는
點은 日本과 中國에 對한 韓國의 態度에서 쉽게 그 根拠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統一된 韓半島가 歷史적으로 大陸에 友好的이었으며 韓日
關係란 日本의 韓國에 對한 一般的인 侵略史였음으로 당연한 追論
이라 할 수 있다. 2)

그런데 日本이 最近 公公然하게 對韓半島政策을 標榜하고 있는
바 그 公言한 內容을 中心으로 日本의 眞意를 打診해 본다.

12) 李基澤 아시아秩序속의 韓國位置, 世代 1973年 2月号
PP. 113-115 參照

2. 日本의 對 韓半島政策

日本政府가 72年 7月 18日의 閣議에서 日本의 各野黨議員 11名이 提出한 政策質問書에 대한 答辯書를 경정 国会에서 밝힌 對 韓半島問題는 다음과 같다. 3)

① 韓國과의 友好協力關係를 앞으로 繼續 維持發展시킬 것을 基本으로 한다.

② 韓·日條約의 폐기를 考慮하지 않고 있다.

③ 對北韓問題에 있어서는 國際情勢의 추이를 보아가며 南北會談 등 韓半島의 緊張緩和의 進展에 따라 人道·文化·「스포츠」 및 經濟等 分野에서의 交流를 앞으로 쌓아 나간다.

④ 現在로서는 北韓의 承認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⑤ 韓半島統一問題에 關해서는 韓民族의 自主的解決에의 努力을 환영하며 이를 可能한限 協助하고 싶다.

⑥ 韓半島에 관한 「유엔」의 諸決議는 正當한 節次를 밟아서 採択된 決議라고 보며 日本政府로서는 앞으로의 韓半島問題討議에 대해서 注意를 기울리 하지 않을 方針이다.

여기서 ① 日本은 아직도 韓國과의 友好協力關係를 對韓半島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있으며 ② 그러기 때문에 北韓을 承認할 생각이 없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러나 ③ 앞으로의 政세추이를 지켜보면서 「緊張緩和方向에 따라」 經濟·文化·「스포츠」 등 各 分野의 交流実績을 쌓아 가겠다는 얘기다. 北韓을 承認하지 않겠다는 方針에서 「지금으로서는」이라는 但畵가 붙은 사항에 注目할

註 3) 한국일보, 1972年 7月 19日字 參照

必要가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韓半島를 비롯한 國際情勢의 추세를 봐가면서 對北韓關係를 段階的으로 改善하되 이와 병행해서 韓國과의 關係도 보다 緊密히 해감으로써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 이룩된 現在의 南北均衡을 繼續 維持하면서 對韓國 및 對北韓協力 關係의 크기나 깊이를 더해 간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日本政府가 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 從前보다는 훨씬 彈力的으로 臨할 可能性을 充分히 豫想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北韓接近에 병행해서 對韓國關係도 보다 緊密히 함으로써 對韓半島政策이 지금 時点を 基準으로 앞으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偏重되게끔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田中政權의 基本的 姿勢이며 그렇게 되면 現在의 南北均衡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이 日本政府의 見解인 것 같다.

어쨌든 한가지 明白한 것은 北韓行 門戶가 서서히 열려가고 있으며 그 速度가 調節되고 있을 뿐이라는 点이다. 그리고 이러한 接近速度도 「사포」政權當時에 比하면 상당히 빨라지리라는 事實이⁴⁾ 더 또한 日本은 "그들의 利害關係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지해 왔던 分斷國家의 國家利益을 犧牲하거나 拋棄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國際政治는 國家別 利害關係에 따르며 人道的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⁵⁾ 日本도 決코 例外가 될 수 없다는 点이

註 4) 朴東淳 특과원, 南北韓에 等距離接近試圖(日 田中政權의 對韓政策反映), 韓國日報 1972年 7月 19日 字參照.

註 5) 마스시다·마사도시(일본 참의원의원), 한국통일문제에 대하여, 70년대 한국통일문제, 통일논총, 제2권 4호 국토통일원, 1971. p.39 參照.

다.

그러면 現實的인 東北亞의 國際的力学關係와 日本의 過去의 對韓半島介入 政策과 韓半島의 日本에 對한 過去의 態度등을 勘案할 때 豫測할 수 있는 期限까지의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의 基本戰略은 무엇인가? 南北韓(韓半島)의 「分割政策」은 서슴치 않고 밀고 나갈 것이라는 答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

이미 日本政府는 80年代 前半에 北韓과 外交關係樹立을 目標로 지금부터 外交的인 障害를 하나씩 제거해 나갈 方針을 세우고 있다는 消息이며, 日本 外務省 「아시아」局이 지난 72年 서울과 平壤에서 共同發表된 南北聲明으로 韓半島의 緊張이 緩和, 日本의 對北韓外交의 變更이 不可避하다고 判斷 새로운 對北韓外交方針을 摸索하게 되었다⁶⁾는 것이다.

그 外交方針은 무엇이겠는가? 4大國가운데 日本이 그의 歷史的인 對「아시아」戰略에 비추어 韓半島統一을 가장 願치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그것은 中共이 日本에 대해 攻勢를 取하는데 統一 韓半島가 利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며 따라서 日本은 韓半島가 現在와 같이 繼續 分斷되어 日本과 中共간의 緩衝地帶役割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美國의 「아시아」문제 專門家들이 觀測하고 있다⁷⁾는데 日本의 外交政策은 韓半島의 分割路線堅持라고 밖에는 推論을 하기 難하다.

註 6) 중앙일보, 1973年 1月22日 字 參照.

註 7) 한국일보, 1973年 2月7日 字 參照.

日本の 對 韓半島政策의 性格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形態로 나타나리라고 보는⁸⁾ 見解도 있다.

첫째, 日本의 對 韓半島政策은 한반도에서 第2의 韓國戰爭을 기피하기 위하여 南北韓 分斷의 「現狀凍結」政策으로 나아가서 「現狀固定化」政策을 교묘하게 韓半島에서 展開하리라 본다.

둘째, 따라서 日本은 「統一의 妨害勢力」으로 表現될 것이다. 日本은 韓半島統一과는 逆의 機能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 決定的인 統一 妨害勢力으로서의 機能은 종국적으로 北韓에 대한 接近政策에서 事實上의 政府 承認形式으로 나타나리라 본다. 勿論 여기에는 韓日 基本關係의 最少한 破壞를 前提로 하여서 成立할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解決해야 한다는 前提條件이 先行된다.

셋째, 「南北均衡」政策의 方向으로 日本은 南韓과 北韓에 대한 均等이라는 口實下에 모든 政策을 이끌어 갈려 할 것이라고 본다.

3. 韓國에의 逆機能

日本外務省이 今年 初4日에 國際情勢를 展望하기를 「多極化가 더욱 進化하여 우리나라를 包含하는 主要國의 行動으로 國際情勢 全体가 左右되어지는 傾向이 지금까지 以上으로 強해 질 것이며」 「朝鮮半島는 南北의 對話가 順調로우면 스포츠, 文化, 限定된 經濟 交流가 實現될 可能性이 있다. 이것들을 通해, 方向으로서는 統一을 目標로 한 平和共存關係가 定着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⁹⁾는

註 8) 李基鐸, 前揭論文, 世代, 1973年 2月号. p.115 參照.

註 9) 朝日新聞, 1973年 1月5日字 參照.

速断과 日本自体的 傳統的인 実利追求를 위해 前述한바 그 对韓半島政策을 敢行하는 경우 韓國땅에 投射되리라고 豫料되어지는 暗影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北韓의 相對的인 國際的地位 上昇에 反한 韓國의 地位下落과 唯一 合法政府로서의 正統性的 褪色化 憂慮.

둘째 南北韓國 競争的 对決樣相助長에 따른 緊張과 不和의 提高化.

셋째 韓半島를 둘러싼 主要國中 國際政治的 發言權의 伸長化¹⁰⁾ - 韓國에게 有利할 수 있는 豫見이 없음.

네째 長期的으로 韓半島의 日·蘇·中共間의 勢力角場化 - 아시아에서의 「4極構造」의 מצ 招來의 可能¹¹⁾ 性.

結論的으로 宿願인 統一의 遷延 또는 阻害 要素로 作用하므로써 韓半島에 暗云을 휘몰아 올 공算을 排除할 수 있을까?

이러한 推論的 公算을 排除할 수 없다면 韓國은 마땅히 國家利益을 위한 賢明한 方案¹²⁾을 講究해야 될 것이다.

註 10) 釜山大学校 韓日文化研究所, 日本新內閣의 安保外交政策의 韓國에 미칠 影響과 그 对策, 국토통일원, 1972. p.63 参照.

註 11) 上掲論文, p.67 参照.

註 12) 釜山大学校 韓日文化研究所, 日本의 对美·对中共 对蘇聯關係展望과 韓日協力方案, 국토통일원, 1972. pp.42-43.

IV. 韓國의 對備策의 模索

1. 韓·日紐帶의 強化

① 民間外交의 改善과 對日弘報活動強化

日本의 社会·左翼系에 대한 對策에도 힘을 기울일 必要가 있다. 北韓에서는 莫大한 資金投入을 통한 對日宣傳活動은 勿論 자민당계의 원까지 초청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일본의 좌익계 조련계신문독자는 물론 야당계인물에 대한 초청을 등한히 해온게 사실이다.

이때문에 그들은 북한을 일방적이고 왜곡된 선전에 덩달아 동조하고 한국을 그릇 인식하고, 일본의 대북한 접근요구세력의 원동력이 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한국을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이 일본정부와의 공식관계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한국계 재일 교포의 일치단결된 조국지원이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더불어 對韓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것이다.

② 韓·미·일안보회의 구성

韓·미·일간의 戰略的 조정과 유기적인 조화를 도모하며

註 1) ①성황용 다나카(田中) 내각과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 국토통일, 1972년 9월호, pp.79-80 參照.

②지주선, 북괴의 대(對)일본접근과 그저의, 국토통일, 1972년 6월호, p.61 參照.

③釜山大學校, 韓日文化研究所, 南北接觸에 關聯·日本의 對北韓接近政策과 우리의 對備策, 国土統一院, 1972. pp.68-69.

또 일본의 군사적인 독주를 막기 위하여 한미 연례안보회의를 확장하여 일본을 포함시키며 만일에 일본이 이에 대한 공식기여를 꺼려할 경우에는 읍저버로서도 기여케 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2)

③ 한일 간에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분업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협조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³⁾이라는 見解도 있다.

韓・日紐帶의 強化問題와 關聯해서 銘心해야 할 일은 "自古로 日本은 韓國의 弱点과 虛所를 찌르며 日本에 매달리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버릇이 興亡해 왔다⁴⁾는 分명한 史實이다. 따라서 韓・日間의 紐帶라는 行態에서 決코 어느 一角에서라도 日本에게 매달리는 印象은 絶對로 排除되어야 한다. 政治・經濟・軍事 其他 모든 分野에 걸쳐서.

2. 外交의 多邊化

오늘날 4 大國勢力均衡制內에서의 韓國의 立場은 ① 韓半島는 勢力緩衝地帶로서 그 戰略의 重要性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可能性 있고 ② 韓國의 外交의 可能性은 固定的인 同盟關係의 限界를 超越하여 보다 流動的이고 自主的인 立場을 取할 수 있을 것이며 ③ 韓半島에 對한 強大國들의 一般的인 態度는 現狀固定의 方向

註 2) 김영준, 일본의 제 4 차 방위력 정비계획분석과 한·일군사적 지역협력체제전망, 국토통일원, 1971. p. 102 參照.

註 3) 위, 논문, p. 102 參照.

註 4) 民主共和黨 宣傳部, 韓日國交正常化問題, 1965, p. 54 參照.

으로 決定될 確率이 가장 많다고 할수 있다면⁵⁾ 韓國이 日本에 一辺倒로 기우는 것을 극력 피하여⁶⁾야하며 (韓日紐帶關係維持下에서) 理論的으로는 對四大國 等距離外交가 國利에 背馳되지 않는 範圍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對美關係를 基軸으로하고 對日關係를 副軸?으로 삼으면서 對中共⁷⁾ 對소接近方向을 試圖하여 日本의 對韓半島 介入의 深化를 制動하여야 할것이며 其他 群小 非敵性 共產國 中立國等과도 果敢하고 慎重한 多邊外交를 展開하여 國際的地位向上에 積極 努力해야 할 것이다.

3. 南北對話의 主導的 遂行

韓國의 統一問題는 事實上 難題中の 難題이다. 또한 南北의 對決에서는 經濟的인 것은 勿論 정신적인 요소가 큰 役割을 하는 만큼 開放社會, 自由社會의 우리가 閉鎖社會, 人工的 規格人間社會인 北韓에게 勝利할 수 있다. 따라서 넓은 眼目에서 관용성과 주도적입장을 지켜 통일 의 可能性을 國內外에 깊이 認識시켜주는데 努力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여 分斷의 固着化를 自認하는 듯한 態

註 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四大國均衡體制下에서의 韓國位置 定立方案, 國土統一院, 1972. p.54 參照.

註 6) 위 p.76 參照.

註 7) 우리 政府는 1973年 3月初에 「中華人民共和國當局」이라 呼稱하여 大陸棚境界에 關係 直接協商용이를 提起한다. 大韓日報, 1973.3.17 字參照.

註 8) 경향신문社說, 南北韓同時承認움직임과 우리의 北方政策, 경향신문, 1973年 4月2日字 參照.

도를 取하게 된다면 그것은 日本의 두개의 韓國政策을 자초하는 結果로 까지 發展될 可能性이 있다. 8)

4. 韓·日基本關係의 再定立

이 問題에 對하여 지나친 豫料일지는 모르나 韓國이 自由中國과 中華人民共和國當局對 日本과의 關係와는 相異하므로 다음과 같은 補完策도 생각되어 진다.

第1案: " UN決議에 依해 樹立된 韓半島內的 唯一合法政府外의 어떠한 形態의 他集團을 別個의 單一政府로 承認하지 아니한다. "

第2案: 締約當事國中 어느 一方이 基本關係條約에 關聯하여 그 精神에 違背되는 關係를 第3의 相對方과 締結할 경우 一方的 締結當事國은 他當事國에 對한 國交斷絶宣言으로 看做된다.

이러한 再定立努力은 日本이 아직 美國의 核우산아래 있을때 美國의 周旋을 求하여 成就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問題는 高次元의 外交政略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한데 마살그린 美國務次官補는 「앞으로 10年間 美國外交는 東北아시아에 重點이 주어질것」이라고 말했다 9) 는바 韓半島의 情勢는 이를 鼓舞的으로 받아 들일것으로 생각한다.

5. 對日 心理的의 效果 志向策

消極性을 免치 못하지 마는 日本政府로 하여금 對韓半島政策의

註8) 성황용, 前揭論文, 前揭국토통일, p.80 參照.

註9) 新亞日報, 1973年 3月 26日字參照.

急進化를 抑制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는 策略을 列举해 본다.

가. 非常事態의 繼續維持

나. 「国防의 날」設定

現在의 國軍의 날을 「国防의 날」로 改稱, 年例的인 記念行事에서 脫皮하여 1) 三軍合同機動演習 2) 豫備軍動員演習

3) 民防空訓練等 全國的 範圍의 國防行事의 實施

다. 1. 21 記念行事

1) 全國의 特別警戒業務組織의 警戒強化 訓練實施

2) 警察의 機動訓練

3) 모의 간첩 수색 作戰演習

4) 地域防禦演習 實施

叙上 日本의 對 韓半島政策에 對한 韓國의 對應策은 摸索해 본바 以上이 그 全部며 最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問題야 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슬기가 總動員되어야 할 또하나의 課題가 아닐까? 한다.

結 論

國際政治는 確實히 現狀固定化의 方向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外交의 方向 亦是 「한 民族속에 두개의 政府」를 認定하는 等距離外交로 줄달음질칠 추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

日本 亦是 對韓半島 現實固定化를 통한 分割政策을 基本戰略으로 삼고 있음이 看取되는 때를 같이 하여 北韓은 從來의 韓日基本關係條約廢棄主張을 後退시켜 가면서 까지 日·北韓 關係樹立을 要求하고 있어 2) 日本의 對 北韓接近에의 길은 또한 幅 넓어졌다. 北韓의 朴成哲은 72年 9月 7日 平壤에 체류중인 日本人記者들과 會見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空文化시킬 수만 있다면 韓日條約을 廢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日 北韓國交正常化의 前提條件을 緩化하자 翌日 日本外務省은 「지금까지 北韓이 취해온 對日 非難態度를 감안할때 큰 變化」이며...韓日條約을 認定하면서 日·北韓正常化를 내건점에 특히 日本은 주시하고 있다. 3) 그도 그럴것이 朴成哲은 결하여 「다나카」內閣은 韓國을 政治적으로 從屬시키는 政策을 中止하고 北韓과의 均衡政策을 취해야만 될 것이다 4) 라고 하며 「한民族·두政府」를 既定事實化하려고 努力5) 하고 있는 까닭이

註 1) 1973年 4月 2日 字 경향신문社說中에서

註 2) 東亞日報社, 社說「日本의 對北韓政策」, 1972年 10月 18日 字 參照.

註 3) 東亞日報, 1972年 9月 8日 字 參照.

註 4) 上揭東亞日報, 參照.

註 5) 중앙일보, 1973年 3月 24日 字 參照.

라 하겠다.

이러한 与件의 变化는 日本의 对半島 進出速度를 加速化하게 되어 韓國의 統一政策目標達成을 위해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은 明白하다.

日本이 그 基本戰略을 韓半島內에 示顯시키느냐? 死蔵시킴으로서 統一韓國을 後世에 引繼하느냐?는 韓國民의 슬기와 勇斷에 달려 있다고 본다. 政府는 日本의 韓半島介入은 앞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複雜한 問題를 提起할 것이므로 日本과의 政治的, 外交的, 軍事的, 經濟的 均衡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⁶⁾는 點을 注視하여 銳意 日本의 对 韓半島戰略을 抑制 乃至 粉碎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对日 基本戰略과 더불어 看過할 수 없는 것은 ①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完壁한 防衛態勢를 갖추고 ② 政治的으로는 民主政治를 發展시키며 ③ 經濟的으로는 確固不動한 自立의 土堅을 닦아 國論을 統一시켜 最善의 戰略은 国力을 배양⁷⁾해야 할것인즉 우리의 統一要請은 우리의 運命을 決定하는 深刻한 것이며, 全國民의 知慧와 愛國하는 精神을 한데모아 達成해야 할 課題로 되어 있⁸⁾느니 만큼 “統一의 길이 아무리 險難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忍耐와 最大限의 良識을 發揮해서 平和的으로 解決지어야 할진대⁹⁾

註6) 李基澤, 韓國의 國家利益과 日本의 对北傀進出, 北韓, 1972年 3月号, p.59 參照.

註7) 김 영선, 축사중에서, 통일 논총, 제 2 권 4 호, 국토통일원, 1971.p.11 參照.

註8)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1972. pp.288 - 289.

註9) 1970年 8月 15日 平和統一構相을 내용으로한 朴大統領宣言前文中에서

이 聖스러운 鵬程에 가로 놓일 어떠한 日本의 底意는 마땅히 對韓 敵對行爲¹⁰⁾로 規定하고 이에 對한 合目的的 合法的 對應戰略을 驅使해야 할 것이다.

京郷新聞文化委員 第1次 報告書에 의하면 우리 高麗建國(AD.918)에서 韓日合邦(1910)에 이르는 992年 동안 外侵은 총 148件에 達한바 被侵의 主因이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中國大陸과 日本의 政治政情 自体에 있었으며 총 148件의 外侵 가운데 日本民族이 60件으로 가장 많다¹¹⁾는 事實을 忘却해서는 안되겠으며 따라서 對日 基本政策을 根本적으로 修正할 段階에 있음을 認識하지 아니할 수 없는 同時에 또한 日本의 對 韓半島政策의 展望과 性格을 不斷히 分析·評價되어 恒常 能動的인 對處로 國利와 民福 兩面에서 그 萬全을 期해야 할 것이다.

10年後의 아시아를 想定할 때, 日本은 臨津江까지를 中共과의 影響圈의 分界線으로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¹²⁾지만 「日本에서는 中共, 北朝鮮의 發展에 두려움을 느껴 「三八度線을 鴨綠江 밖으로 떠내민다」고 하는 軍事的 政治的意圖를 가지고 韓日會談에 積極적으로 臨하게 되었다¹³⁾는 事實을 想起할때 이는 韓國으로서 重大한

註 10) 日本의 北韓接近政策은 對韓國「內政干涉」이며 「敵對行爲」를 構成한다고 할수 있다. 李基澤, 前掲論文, 北韓, 1972年 3月号, p. 57 參照.

註 11) 京響新聞, 1972年 8月 26日字參照.

註 12) 민병찬, 安保狀況과 統一의 關係, 國土統一院, 安保의 側面에서 본 南北共同聲明, 1972, p. 19 參照.

註 13) 井上清, 新安保體制의 歷史的展望, 現代의 眼, 1965, 12月号, p. 39 參照.

드오 지닌다고 하겠다.

韓國이 大陸의 共產圈과의 「均衡」에서는 韓·美同盟으로 充分하다. 그러나, 美·中共接近이라는 새로운 勢力 再編成 過程에서 日本은 새로운 「現實政策」을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14)

日本の 對 韓半島基本政策에 對하여 단순한 「說得」이나 「特使派遣」만으로 그 対応策을 삼을 수는 없는 段階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 보다도 「國家的 反應」과 대로는 「韓·日基本關係의 再檢討도 아울러 고려에 넣고 그 対応策을 세워야 하리라」본다. 15)

國家의 첫째課業이 自己保存에 있다 하겠으므로……움직이는 世界를 停滯한 것처럼 過少評價하거나 아무런 對備策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後患을 다음 世代에게 남겨주게 될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屢한 오늘의 條件을 내다보는 먼 展望, 세롭고 銳敏한 歷史感覺과 政治力에 굳은 決斷이 없이는 決코 勝利의 生存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16) 는 豫料를 排除할 수 있더라도 “우리의 國權을 確固히 지키고 安定과 繁榮을 이룩하여 남들처럼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오늘에 사는 우리 世代가 반드시 이룩해야할 歷史的使命” 17) 임을 再認識할때 우리의 예지가 總動員되어 지기를 거듭 強調하지 아니할 수 없다.

註 14) 李基鐸, 前揭論文, 北韓, 1972年3月号, p.59 參照.

註 15) 李基鐸, 上揭論文, 上揭北韓, p.58 參照.

註 16) 大韓民國政府, 韓日 회담백서, 1965年, p.147 및 148 參照.

註 17) 朴大統領의 鄉土豫備軍常設5周年 談話文中에서, 중앙일보, 1973年 4月9日字 參照.

参 考 書 誌

大韓民国政府, 한일회담백서, 大韓民国政府, 1965.

釜山大学校韓日文化研究所

- 日本의 对美·对中共·对蘇聯關係展望과 韓日協力方案, 国土統一院, 1972.
- 日本의 実態, 对外政策 및 对韓政策과 韓國安保를 위한 对日戰略摸索, 国土統一院, 1972.
- 日本內閣의 安保外交政策이 韓國에 미칠 影響과 그 对策, 国土統一院, 1972.
- 南北接觸에 關聯, 日本의 对北韓接近政策과 우리의 对備策, 国土統一院, 1972.

大韓民国外務部, 국제경제, 1972·II호, 외무부, 1972.

한국외국어대학부설,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 蘇聯의 実態, 对外政策, 对韓政策과 韓國安保를 위한 对蘇戰略摸索, 国土統一院, 1972.

民主共和黨宣傳部, 韓日國交正常化問題(補完版二), 民主共和黨宣傳部, 1965.

민병천, 安保狀況과 統一의 關係, 国土統一院, 1972.

김영준, 일본의 제4차 방위력 정비 계획분석과 한일 군사적 지역협력체 제전망, 국토통일원, 1971.

国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1972.

国土統一院, 日本의 軍國化 可能性診斷, 国土統一院, 1972.

김영선, 「축사」, 통일논총, 제2권4호, 국토통일원, 1971.

金洪喆, 日本의 아시아戰略再編成方向, 政經研究, 1972年 11月号
李基鐸, 아시아秩序 속의 韓國位置, 世代, 1973年 3月号
李基鐸, 韓國의 國家利益과 日本의 對北傀 進出, 北韓, 1972年 3月号
董天, 帝國主義日本과 韓國, 歷史學會編, 韓國史의 反省, 新丘文化社,
1969.

성황용, 다나카內閣과 日本의 對韓政策, 국토통일, 1972年 9月号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四大國均衡體制下에서의 韓國位置定立方
案, 國土統一院, 1972.

崔敬洛, 美·소·中共의 三角關係와 日本, 國防研究, 第15卷第1号,
國防大學院安保問題研究所, 1972.

지주선, 북괴의 對日本 접근과 그 저의, 국토통일, 1972年 6月号

井上清, 新安保體制의 歷史的展望, 現代의 眼, 1965, 12月号

上村伸一, 占領·獨立, 新時代, 時事通信社, 昭和36年

마스시다·마사도시, 한국통일문제에 대하여, 통일논총, 제12권 4호,
국토통일원, 1971.

다나카 야스마사, 1946-72사이의 여론조사에 반영된 現代日本의
변천, 1972.12.

존·K·에머슨, 日本의 딜레마, 世界週報, 1972年 8月 8日号

허만·칸, 70年代의 日本, 통일논총, 제2권 3호.

기타:

- 日本每日年鑑 (1971年版)
- 朝日新聞, 每日新聞
- 서울 시내 主要日刊新聞
- 同和年鑑 (1972年版)